

제334회 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4 호

국회 사무처

2015년6월2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 1. 경제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 1. 경제에 관한 질문 ..... 1
o 반론발언 ..... 56

(10시04분 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의화 수고했습니다.

1. 경제에 관한 질문

(10시06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충북 청주 흥덕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 흥덕갑 지역 국회의원 오제세입니다.

2015년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속되는 경제 침체와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급증, 최근 발생한 메르스 여파 등으로 국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사죄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께서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정쟁을 중단하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인 대처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초당적인 국가혁신위원회를 만들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4대 국정혁신 과제를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4대 국정혁신 과제는, 첫째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둘째 부채 의존 경제의 중단, 셋째 조세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세정 개혁, 넷째 적립식으로 부과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의 부과식 전환 등 네 가지 과제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수고 많으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제세 의원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환자가 건강하게 퇴원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제세 의원 대처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되셨는데 제가 총리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총리께서는 기득권 편이 아니라 서민 편의 총리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제세 의원 현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부의 불평등 심화와 경기 침체, 노인 빈곤, 저출산, 가계부채 급증 등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제세 의원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께서는 국가는 무엇인가 또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고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의원님 말씀같이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점을 알고 저희 공직자들이 분발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제세 의원 이런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인 협력 기구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 방법에 관해서는 좀 더 상의해서 좀 효율적인 방법 또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제세 의원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께서,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보기에 는 고용과 소득이 증대가 되지 않는 양적인 성장

그리고 구조 개혁과 혁신이 없는 경제정책, 부의 불평등 심화, 저출산으로 인한 미래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우리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경기 침체 주요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같이 작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수출 부진이라든지 국제적인 경기가 어려운 문제들도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제세 의원 경기 침체의 원인 네 가지, 좀 자막으로 띄워 주시면……

그런데 그 원인 중에서 저는 첫째…… 네 가지 원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성장과 부의 불평등,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수요 부진을 야기하고 있고 구조 개혁과 혁신이 투자 부진을 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경기 침체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의 불평등 표 좀 띄워 주실까요?

부의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의 멸망을 초래했고 세계 경제의 붕괴를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례를 보면 천년 제국 로마제국이 멸망한 것이라든지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난 것이라든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께서 ‘사회 불평등이 수준을 넘어가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그리고 세계 자본주의의 리더들이 모인 다보스포럼에서 2015년을 ‘소득불평등이 문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러한 부의 불평등이 모든 악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의 그런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를 창출해서 창출된 부가 골고루 잘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결국 경제 주체들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한 방향으로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제세 의원 우리나라의 부의 불평등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면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나라 그리고 기적을 이룬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에 육박하는 나라라고 얘기돼서 성공한 국가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이

고 자살률이 1위이고 출산율이 최하위이고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면을 보여 주고 있어서 이것은…… ‘성공한 국가의 불행한 국민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희들보다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동안 단기간 내에 민주화와 함께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성공한 나라로 그렇게 보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국민들은 더 겸손하게 더 발전해 가야 된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없는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의 불평등이 너무 심화돼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제세 의원**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 현황을 보시면 상위 10%의 자산과 소득을 상위 10%가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90%가 나머지 50%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고, 10억 이상의 금융자산 보유자가 18만 명인데 이분들이 406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서 가계부채는 1000만 가구가 1인당 1억 이상 1099조의 부채를 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부의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기 위한 노력들을 정부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해서 같이 고쳐 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제세 의원** 또 우리 경제, 우리 미래를 어렵게 하고 암울하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출산·고령화 추세입니다.

연령별 인구전망을 보면, 총리님 보시면 2040년에 경제활동인구가 현재 3600만 명에서 800만 명이 줄어서 280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00만 명에서 무려 1000만 명이 늘어나서 1600만 명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206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4300만 명으로 줄고 경제활동인구는 2100만 명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는 1800만 명이 됩니다. 불과 25년 후에 경제활동인구가 800만 명이 줄고 노인이 1000만 명이 늘어나고 또 나아가서 20년 더 지나면 경제활동인구가 다시 또 700만 명이

줄어서 2100만 명밖에 안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반으로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무려 3배로 늘어나서는 1800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가히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조만간 노령사회로 들어가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노령화사회로 이제 급격히 진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년 전부터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해서 저출산의 극복 문제 또 노인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구조적인 개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해에 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의 힘을 모아가야 할 큰 과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제세 의원** 세계에서 저출산율이 1.3% 이하가 되면 높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13년째 1.3% 이하가 되고 있고요, 작년에 출생한 아이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1.3% 밑으로까지 내려갔던 이런 때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제세 의원** 작년에 출생자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확한 그 숫자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오제세 의원** 작년에 출생자 수가 41만 9000명입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에 90만 명까지, 80만 명까지 출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의 반도 안 낳고 있습니다.

41만 명을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대학교 정원이 지금 50만 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출생자 수가 41만 9000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되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제세 의원** 우리나라 부채도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는 530조, GDP 대비 35%, 공공기관부채도 500조, 가계부채는 1099조, 기업부채는 1490조 해서 총 3500조의 국가부채가 되고 있어서 이미 기업과 가계 부채는 한계치를 넘어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통계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미 좀 시작한 했다 하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오제세 의원**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는 20대·30대는 청년실업으로 일자리가 없고 혼인 결혼도 못 하고 아이도 못 낳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70대·80대는 50%가 빈곤층으로 전략해서 OECD의 노인 빈곤이 12%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49%로 어마어마한 노인 빈곤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대·50대·60대, 전 세대가 부의 불평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위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혁신 과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제기조 전환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기조를, 첫째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구조개선으로, 대기업의 주주 이익 중심에서 근로자의 고용과 소득증대 중심으로 그리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묵인에서 불공정거래 차단으로 그리고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면서 경제정책을 늘 보완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제세 의원** 다음은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적립식 연금제도로 현재 500조를 적립하고 있고 이 적립금이 2040년에 2500조까지 올라갔다 2060년, 불과 17년 만에 제로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17년 동안에는 1년에 150조씩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첫째 지금 우리 국민연금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고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45년만 지속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0·80년대에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이삼십 대는 40년 동안 납부만 하다가 막상 받을 때는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때는 수급이 불확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연금제도는 70대·80대는 무용지물, 이삼십 대는 불확실성 그리고 현재 40대·50대·60대는 낸 것보다 세 배,

네 배, 다섯 배까지 더 많이 받는 과도한 혜택의 연금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제도를 부과식에서 적립식으로 바꿔서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리고 현재 받는 사람들의 과도한 혜택을 줄여 줘야 된다 그리고 500조, 2500조라는 돈이 쌓였다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또 이 돈을 운용하는 데도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초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적연금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회에서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만들고 계시고 또 특위도 구성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제세 의원** 그래서 여·야·정, 시민사회, 학계가 참여하는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위원회라든지 조직에 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제세 의원** 다음은 부채 의존 경제의 위험성입니다.

부채 의존 경제가, 미국 금리가 향후 3년에서 5년에 걸쳐서 현재 0.25%에서 3~5%까지도 인상될 수가 있거든요. 2008년에 미국 금리가 5%였습니다. 이렇게 만일 미국 금리가 0.25%에서 5%로 올라갈 경우에 우리나라 금리도 1.5에서 5%, 6%, 7%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급등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줄기 때문에 주택은 남아돌게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값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채 의존 경제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다 그리고 삼사 년 후에 우리나라 경제 파탄, 제2의 IMF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채 경제를 중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가계부채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경제활성화에 굉장히 큰 장애가 될 수 있고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경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금융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것들이 경제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부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제세 의원 다음은 세정 개혁입니다.

세정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정의·조세정의를 위해서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세정은 국세청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그 독점으로 인해서 국세청의 부패가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가 가장 큰 정치적 무기가 되고 있는 것도 이런 국세행정의 잘못된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탈세야말로 사회의 가장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정 개혁을 위해서 조세정보 공개 그리고 국세청에 외부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미국은 98년에 상원에서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하경제율이 8%로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지하경제가 2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하경제를 5%만 줄여도 세수가 10조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금을, 법인세를 더 걷는 다든지 다른 세금을 더 걷는 것보다도 저는 국세 행정을 개혁해서 지하경제를 줄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세정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 공감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협의를 해 보고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 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제세 의원 그래서 세정 개혁을 위해서 국세 정보 공개를 위한 법률 개정과 국세청에 외부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처리하시면 좋겠고 저희는 또 이 세정 개혁 전반에 관해서 정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늘 스크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제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의 본령은 약자인 서민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가 보호해야 할 서민층은 '7포 세대'라고 불리는 300만 청년세대, 300만의 노인 빈곤층, 800만의 비정규직, 400만의 영세자영업자, 250만의 장애인 등 국민의 절반에 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정치가 부유층과 대기업 등 기득권의 편에서 있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기득권의 편이 아닌 서민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서민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만 잘사는 사회가 아니라 오천만 국민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명심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시간을 정확하게 잘 쓰셨습니다.

오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대문을 출신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언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서대문을 출신 국회의원 정두언입니다.

우선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많은 환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일선에서 오로지 사망감 하나로 혼신의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 의료진 그리고 관계 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질의는 첫 번째 사회 구조조정기의 최대 피해자인 서민층 보호 대책, 두 번째는 그 일환으로 신용카드 부당 수수료 시정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 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가진 국정운영 시스템의 시급한 복원 대책 등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 모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와 있다는 것은 이미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난은 경기순환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지요.

우리가 사회의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없이는 이 난국을 타개한다는 건 바로 요행을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구조조정 작업은 바로 '더 롱 앤드 와인딩 로드(the long and winding road)',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우리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경제난에서 제일 고통받는 국민은 역시 서민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조조정과는

별개로 강도 높은 서민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금 이 정부의 서민 대책이 뭐 있을 겁니다. 죽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서민들이 ‘아,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다’ 할 만한 그런 서민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제가 이제 안정 내지는 저성장 국면으로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가장 고통스러운 계층이 서민계층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쟁력이 좀 취약한 계층, 이런 계층들이 말하자면 제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계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생계비를 조금 절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취약계층, 다시 말해서 소상공인이나 농어업 이런 쪽에는 직접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네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두언 의원 그러니까 늘 하던 말씀이라는 거지요. 국민들이 듣기에 ‘아, 이제 됐구나’라고 하기에는 늘 하던 얘기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제 관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이 한계에 와 있을 때는 소득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지요. 그럴 때 정부가 할 일은 가계의 비용을 줄여 줘야겠다, 비용을 줄여 주면 그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계에서 비용이 가장 큰 게 뭐냐 이거지요. 순서대로 보자 이거지요. 사교육비가 제일 클 겁니다. 그다음에 주거비 크고요. 의료비 크고 여가비도 이제 커집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의 사교육비를 먼저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줄여 주고 있나요? 그리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여전히 가계……

○정두언 의원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전월세비 그리고 상가임대료 줄여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줄여 주고 있나요? 그리고 의료비 줄여 줘야 됩니다. 또 여가비 줄여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줄여 주고 있나요?

정부가 이런 관점에서 가계의 비용 줄이기에 주력할 때 서민들이 ‘아, 이제 정부가 뭘 하는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말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통신비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음성통화는 무료로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비 관련해서도 지금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부동산 거래가 다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다마스 집값 상승은 지난해 한 1.4% 정도 상승에 그쳐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구조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전세가격 상승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단든지 등의 국지적인 전세난 완화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저유가 상황을 감안해서 전기료라든지 그런 부분도 최대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두언 의원 자, 부총리님, 제가 가계비용 줄이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부당 수수료 시정, 중소기업인 보호 대책이지요.

이 얘기는 금융위원장을 모시고 얘기할 텐데, 부총리님 잘 들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정두언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앞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가계의 비용 절감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우리 서민층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비용이 가장 큰 것이 바로 신용카드 수수료거든요. 그런데 이 신용카드 수수료가 여전법이라는 시대착오적인 규제 악법입니다. 이 악법 때문에 중소기업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 속에서 정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과정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신용카드사는 무엇으로 먹고삽니까? 카드 수수료료로 먹고삽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갑을관계로 보면 각 가맹점들이 갑입니다.

그런데 카드 수수료는 갑이 정하거나 적어도 갑이 지배적인 위치에서 정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을의 위치에 있는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행 여전법상에는 가맹점이 예를 들어서 A카드, BC카드를 가져온 소비자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할 경우에 징역이나 벌금형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BC카드 매출전표는 현행법상 반드시 BC카드사에게 팔아야 합니다. 그러니 가맹점은 대금 전표를 발행할 때나 대금 전표를 청구할 때나 전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카드사는 이 대금 시장에서 일종의 완벽한 쌍방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현행 여전법이 바로 이 신용카드사에게 쌍방독점적인 지위를 허용해서 본래 을의 지위였는데 갑의 지위로 바뀌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법은 쌍방독점의 지위에 있는 카드사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아주 시대착오적인 규제 악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갈라파고스 규제입니다.

카드사가 무슨 공기업도 아니잖아요. 자선단체도 아니고요. 그런 카드사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 불쌍한 중소 가맹점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 겁니다.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규제를 철폐해서 시장에 맡기는 겁니다. 각 가맹점들이 자기의 매출전표·채권을 양수하는 기관을 시장에서 고를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카드사 이외에 각 금융기관도 이 매출전표를 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맹점은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기관에다 양수하게 되고요. 수수료는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제가 법 개정 후에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카드 수수료가 지금보다 1% 정도 내려갑니다. 돈으로 환산해 보면 2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시대착오적인 규제 악법 때문에 2조 가까운 돈이 중소기업인들의 호주머니에서 부당하게 신용카드사로 간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쓰였나요? 무슨 공공

목적으로 쓰였나요?

금융위원장님, 지난 3월 18일 저를 포함해서 스무 명의 의원들이 신용카드 부당 수수료 시정하기 위한 여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정부 무위에 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임종룡**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카드채권 매입기관에 관한 규제 개선 내용은 기본적으로 카드채권의 매입기관을 확대를 해서 경쟁을 통해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 보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언 의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래서 그러한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해야 될 일이. 역시 카드채권을 정산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 구축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냐, 그리고 카드사하고 매입사 간에 하나의 정산 수수료라고 하는 새로운 수수료 하나가 생기는데 이게 전체적인 수수료 체계 인하에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이냐 하는 등의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의 기본적인 도입에 따른 효과를 면밀히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도입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언 의원** 장관님, 이게 바로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장관님은 제 법 개정안의 취지를 전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신용카드법의 문제는, 신용카드 제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도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장관님까지도 제 법안의 취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제 법안을 4당사자 체제를 얘기하는 것으로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데 그냥 기존의 3당사자 체제를 유지하면서 신용카드사도 손해 안 보고 모두 다 윈윈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이 새로운 구축비용이 든다…… 정산 수수료 얘기는 4당사자 체제를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관님도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금융위원회의 신용카드를 담당하는 직원

을 봤더니 몇 명이나 하면 반 명입니다, 반 명. 그러니까 전담도 아니고 다른 업무랑 같이 해요. 이 사람이 자료를 누구한테 받느냐 하면 여전협회에서 받는 겁니다. 이 친구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서면질의를 김용태 의원 통해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전혀 엉뚱한 답이 와서 또 보냈더니 또 엉뚱한 답이 와요. 설명하려고 했더니 주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장관님, 이렇게 합시다. 정말 장관님이 이걸 오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위 법안소위에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장관님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이 법안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장관님은 이해하시리라고 봐요, 제가 장관님 능력을 아니까.

이것은 정말 오해에서 비롯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윈윈하는 제도가 지금 제안된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 꼭 시간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의원님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의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두언 의원** 아니, 의지뿐만 아니라 정말 잘못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야당 의원 같으면 굉장히 야단을 칠 일입니다. 질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법안 내용을 모르고 와서 장관님이 답변하시니까 막 호통을 쳐야 될 일인데 제가 잘 아는 분이라서 이렇게 살살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 취지가, 카드수수료 체계를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두언 의원** 조금 전에 화면이 띄워져 있었거든요. 사실 장관님이 그것을 자세히 보면 ‘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우리 애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잘못 이해했구나’라고 알 겁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두언 의원** 부총리께서도 제 얘기 들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정두언 의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조라는 돈이 정부 예산 쓰지 않고 매년 중소 상공인들한테 다시 돌아가는 제도입니

다.

잘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정두언 의원** 총리님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감사합니다.

○**정두언 의원** 작금의 메르스 사태는 제2의 세월호 사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심각한 문제는 메르스 사태도 사태지만 지금과 같은 국정운영 시스템으로는 제3, 제4의 세월호 사태마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시스템 붕괴니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국정운영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청와대만 보입니다. 오죽하면 언론에서도 ‘당정’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당청’이라는 말만 씁니다. ‘당정청’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당청’이라는 말은 이 정부 들어서서 통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각 부처 장관은 존재감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북한의 장관급은 아는데 우리나라 장관은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도 합니다.

총리는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총리는 임명할 때만 요란하지 일단 임명되고 나면 총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기업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으로 치면 이제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여러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계열사는 사장들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대기업 사장들의 존재감이 전혀 없다고 칩시다. 큰 기업을 총수와 몇몇 총수의 측근들이 운영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구멍가게처럼 운영하는 것이지요. 장차 이 대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가 존재감이 없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인사권 문제입니다.

총리님, 청와대가 각 부처 인사까지 주무르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장관이 인사권이 없다 보니까 별 힘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으니까 책임 있게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청와대에 인사비서관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인사비서관이라는 게 청와대에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와대의 인사비서관이라는



이 제도가 위헌적인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장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민주국가에서 권력은 국민한테 있습니다. 국민이 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한테 권력을 위임합니다. 그런데 그냥 위임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서 위임합니다. 그래서 법에 대통령의 권한과 장관의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마치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니까 그 장관의 권한은 내 권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런 식입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는 권력이 공공재라는 얘기입니다. 퍼블릭 굿(public good)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이 권력을 프라이빗 굿(private good), 사유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권력의 사유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엄청나게 고생했지요.

우리가 흔히 소위 87 체제를 민주체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양상 민주화입니다. 우리 정치지도자들의 권력관이 권력을 공공재로 인식할 때 그때야 비로소 민주화된 국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총리께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바로 국정운영시스템의 복원, 정부를 존재감 있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포부가 있으십니까? 특히 인사권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 생각에는……

○**정두언 의원** 공감한다고 하셨으면……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에 여러 부처가 있습니다. 각 부처가 책임행정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인사권 문제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마는 각 부처가 부처별로 책임행정을 펼치고 총리, 부총리가 그것을 잘 통할하고 또 조정하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유기적으로 할 때 우리 국가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두언 의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총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돌아갑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인사권은 대통령께서 직접 행사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장관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있으면서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언 의원** 총리께서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리께서 별 힘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저도 총리 전문가입니다. 책 ‘최악의 총리 최고의 총리’ 저자인데요. 총리가 힘이 없습니다. 예산권도 없고 인사권도 없습니다. 각 부처가 총리 말을 듣습니까?

총리께서는 의지는 강해 보이지만 어떤 힘을 가지고 정부를 바로잡으실지 제가 그게 좀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물론 권한의 문제를……

○**정두언 의원**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여쭙어서 죄송합니다만.

○**국무총리 황교안** 아닙니다. 권한의 문제를 말씀하신다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총리의 권한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찾아서 제가 일하는 동안 의원님과 국민들의 걱정을 좀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두언 의원** 총리께서는 문제 핵심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자기 권한이 뭔지 아십니다. 총리의 권한은 헌법에 있습니다.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이 있고요. 해임건의권이 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행사해 본 적이 없지요. 각료 임명할 때 청와대에서 다 하고 총리 사인 받으러 가지 총리가 그것 절차 밟은 적 있습니까? 총리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옛날에 어떤 일이 생겼지요? 이회창 총리 사태가 생겼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용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총리께서 존재감을 가지시고 정부를 복원해 주십사 하는 제 충정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꼭 그 일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역사에 기록되는 총리가 되실 것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각 부처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책임행정을 펼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두언 의원** 제발 그렇게 되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서민보호 대책 그리고 중소기업인 대책, 특히 중소기업인 대책, 신용카드 부당 수수료 시정법안, 여전업법안 개정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정두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갑 출신 신학용 의원입니다.

지난주를 고비로 메르스 사태가 진정된다는 소식 정말 기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료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 사태 이후의 원인 규명, 재발 방지책, 책임자 처벌, 거기에 따른 제도 개선,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정부의 메르스 초동대응 실패, 총리가 국민께 사과하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초동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신학용 의원** 실패는 아니고 미흡했다? 답변하신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용 의원** 확실히 해 주세요. 실패는 아니고 미진했다 그것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 장면을,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동단계의……

○**신학용 의원** 좀 확실히 대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는 ‘대통령께서는 적절한 때에 잘 대처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왜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께서 하실 일이 있고 또 총리나 총리대행이 할 일이 있고 또 부처 장관이 할 일이 있고 실무자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학용 의원** 대통령은 잘 대처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것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상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초기에 좀 미진한 점이 있었고 그 점에 관해서는 파악이 된 대로 또 지적이 된 대로 바로바로 고쳐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판단은 국민이 하실 겁니다. 저는 총리가 사과하셨는데 국민들은 대통령의 사과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건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우선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학용 의원** 제 물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신학용 의원** 그런 건의는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건의하는 것이 괜찮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총리를 언론에서 ‘반쪽 총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언론이라기보다도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그걸 들어서 알아요? 신문 안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신학용 의원** 그런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오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 견해가 계시겠지요. 투표율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득표율을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제게 맡겨진 일을 다하기 위한 책임총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이제 총리께서는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청문회 때 병역면제, 전관예우, 특별사면, 청탁, 세금탈루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자료제출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무더기로. ‘깜깜이 청문회’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자료들은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요구가……

○**신학용 의원**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법을 위반 하셨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요구가 계셔서 그 부분 충실하게 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하다는 지적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유감의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신학용 의원** 그러면 이전 총리후보, 장관후보자들 국회법 위반했네요? 지금 총리의 답변을 들으면 다른 후보자들은 다 자료제출한 게 국회법 위반이야. 맞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수백 건의……

○**신학용 의원** 다 법 위반하고 사생활 침해하고 그러면서도 자료제출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해명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하나 한 것 없이 그냥 총리가 됐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수백 건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었는데 그 상당 부분을 제출했고……

○**신학용 의원** 가장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법률적인 제약이 있거나 없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신학용 의원** 안대희 대법관, 정말 강직하고 도덕적으로 괜찮고 정책적으로도 확실한 본인에 전관예우 하나 때문에 자진사퇴했습니다.

국민들은 알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송두리째 빼앗아간 총리, 그동안 법치주의를 외치면서도 이용한 총리의 또 다른 얼굴이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일 날 국회의원들에게 한 사과, 국민들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다 지나갔어요」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의 청문회는 안 끝났어요」 하는 의원 있음)

총리, 언론에 ‘정권의 호위무사’, ‘대통령의 호위무사’라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바른 총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여러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십니다. 저는 모든 얘기들을 잘 수렴해서 바른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마는 호위무사, 왜 ‘정권의 호위무사’, ‘대통령의 호위무사’라는 말이 나왔느냐 그걸 알고 싶습니다. 총리의 생각은?

○**국무총리 황교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십니다. 그중에 그런 말씀이 계시는 것까지도 유념하고 포괄적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의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예, 고맙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제 총리는 정권이나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호위무사가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

○**신학용 의원** 답변은 안 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총리 취임 초기부터 ‘국민의 총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총리의 경력을 보면 경제 분야는 하나도 없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공무원들의 보직·경력 관리를 보면 경제 분야만 하는 공무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신학용 의원** 좋습니다.

지금 부총리 나와 계신데 아마 선거 때문에 끝나오실 것 같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왜 그 많은 경제 전문가를 놔두고 공안검사 출신 총리를 임명했을까 의구심이 많습니다. 왜 법무부장관 출신을 총리로 임명했을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거친 분이 한쪽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본인이 각 분야를 직접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각 부처, 내각을 통괄해서 국정필요한 부분들에 대응하고 또 조치해 나가는 것이 총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자라는 점을 잘 소통하고 공유해서 이루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그것 때문에 언론에서는 지금 ‘공안정국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못 보셨습니까, 그것도?

○**국무총리 황교안**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신학용 의원** 그만큼 우려한다는 겁니다. 지금 힘을 한 데 합쳐도 힘들 때 공안정국을 일으켜 가지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을 짓밟는 그런 시대가 다시 올까 봐 겁이 난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일은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그런 분야에서 검사로 일을 오래 했고, 또 장관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제가 공안장관이라는 말은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각 실·국·본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균형을 갖춰서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범죄 피해자를 지키고 또 범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갱생할 수 있도록 교도소에서 교육을 강화하는 이런 측면의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총리로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통합하고 또 화합하고 잘 추스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총리의 그동안 법무부장관으로서의 활동 상황을 보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고, 지금 약속하신 대로 그런 것은 없을 거다 이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그러니까 공안정국도 경제활성화와 같이 함께 하겠다 그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신학용 의원** 아니, 답변을 확실히 부러지게 해 주세요. ‘공안정국 그런 것은 시대를 건너간 일이다. 한물갔다. 그런 것은 없을 거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텐데……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지금 수사 착수했다면서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보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확인 안 하셨습니까, 총리가 되서 가지고.

**○국무총리 황교안** 총리가 수사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신학용 의원** 수사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서울시장으로서 직무행위를 한 거예요, 과잉대응일지는 모르더라도. 그것을 갖고 수사에 착수를 하다니……

**○국무총리 황교안** 고발이 들어와서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자꾸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요, 안 그러면 위법수사가 되니까. 문제는 서울시장이 메르스 퇴치를 위해서 과잉대응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지금 나름대로 자기 직무를 하는데…… 그렇다면 초동대응 실패한 또는 잘못된 옛날에 총리권한대행,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자들 지금 왜 수사 안 해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안은……

**○신학용 의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똑 부러지게 답변 하나 못 하십니까, 그런 말 하면?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무슨 말씀을…… 제가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고발장이 들어와서, 고발장이 들어오면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절차나 방법들은 여러 가지지요. 그런 부분은 검찰에서 판단할 일입니다마는 일단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신학용 의원** 답답합니다. 확실히 좀 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했는데, 총리께서……

법무부장관 출신으로서, 검사 출신으로서 지금 이 상황에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발표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국무총리 황교안** 검찰에서……

**○신학용 의원** 자, 경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습니다.

**○신학용 의원** 우선 총리로 취임하시는 총리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국가를 잘살게 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에 대한 철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부가 창출이 되어서 우리 안에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부가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고루 잘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어떤 부분들을 언제 할 것인가 그런 선후의 문제라든지 범위의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정책을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학용 의원** 그 기본적인 철학에 저도 아주 동의합니다.

소득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사회는 불안하고 그리고 경제성장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 그동안 많은 논문에서 지적된 것 아시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범세계적인……

○**신학용 의원** 그다음에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멋진 목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에 알맞은 정책을 써야 되는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신학용 의원** MB 정부 때의 7·4·7 정책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학용 의원** 그것은 7% 성장에 4만 불, 7대 강국.

7·4·7이 뜨자마자 그냥 추락해 버렸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번 박근혜정부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있습니다. 4·7·4 공약입니다.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4·7·4 공약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 봤습니다마는 국정기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4·7·4, 목표예요, 저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보시면요, 잠재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

현재로 봐서 잠재경제성장률 4% 턱도 없습니다, 아직.

고용률 70% 하려면요, 연 60만 명 이상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평균, 올해도 31만, 32만 명밖에 안 됩니다.

다음에 국민소득 4만 달러, 2017년에? 지금부터 연 4% 성장한다 하더라도 2020년에나 가능한 그런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를 두고 경제정책을 쓰니까 하나하나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단계는 경제가 국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우리나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목

표를 이루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제가 총리께 물어보는 것은 4·7·4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달성 불가능한 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4·7·4 정책, 공약은 그야말로 이룩도 못 한 땅콩회항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총리께서는 새로운 목표를 만드시든지 안 그러면 달성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그다음에 경제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 소득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소득불평등이 그야말로 국민의 화합을 해치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이것이 오히려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의 논문 발표 결과 나왔다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불평등의 심화는……

○**신학용 의원** OECD의 보고서입니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한국 내 소득불평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임금 격차 확대 시킴으로써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OECD 평균보다 낮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소득불평등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경제질의 있을 때 그때 한 번 더 만나 뵙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하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들어가십시오.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신학용 의원** 언제까지?

(웃음소리)

다음 선거 안 나가실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나가시면 여태까지 초이노믹스, 이것 효과도 별로 없는데 계속 밀고 나가시면 그 후유증 누가 다 감당하려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추경하실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신학용 의원** 추경.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금 메르스……

○**신학용 의원** 아니,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이렇게만 이야기 나오고, 할 거면 ‘한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답 안 하시고 계속 그렇게 연기만 날립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된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추경을 포함한 적정 수준의 경기보강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메르스 사태 때문에 거의 0.3~0.5%의 성장저하 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느 정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메르스 사태가 어떻게 될지 여부에 따라서도 많이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우리 경제 충격이 어느 정도다’ 단정지어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신학용 의원** 금융연구원 결과는 2.8%로 잡고 이것도 한 달 내에 0.1% 저감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두 달, 석 달 되면 0.2~0.3 더 마이너스하면 한 2.5~2.6%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세수수입도 굉장히 줄어들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금융연구원 한 연구원의 견해가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실상을 제대로 다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연구 등등 해서 세밀하게 관찰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에 맞는 적절한 충분한 수준의 경기보강 대책을 내놓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그러면 추경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세입추경 또는 세출추경 다 하실 것입니까, 하나만 할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경 여부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가 덜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그러면 세입결손이 어느 정도 예상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최근 몇 년 동안 세입결손이 일어났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일 테고요, 금년에도 작년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다소간의 세입결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한 10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작년에는 10.9조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세수 상황은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왜냐하면 4%로 잡아 가지고 세입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도 안 될 것 같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세입이 감소할 것이고 메르스 사태까지 합하면……

그러면 좋습니다, 10조 정도 잡고 그러면 경기회복을 위해서 전문가들은 한 20조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30조 해야 될 것 같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닙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추경을……

○**신학용 의원** 지금 빨리 해야 될 텐데 아직도 구체적으로 모르시고 언제 추경을 요청해 가지고 하시려고 그러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신학용 의원** 준비가 안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한창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추경 규모를 밝힐 단계는 아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내……

○**신학용 의원** 총리께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서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알겠습니다.

추경을 하시려면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새누리당이 국가재정법 바꿨지요? 정말 추경을 못 하게 해 놔습니다. 하려면, 첫째 정말 대국민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경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

그다음에 세수,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세입

을 확정시켜야지요, 좀 더 많게. 아니, 법인세 원상회복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 왜 안 됩니까? 지금 이렇게 세수 자꾸 부족한데…… 이것을 놔두고 추경을 계속하고 법을 어기고 국가재정법 어겨 가면서, 정부가 법을 어겨 가면서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안 해 줄 수는 없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법에 입각해서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조화롭게, 규모 있게 가도록 그렇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추경을 해서 경기를 보강하고 또 한쪽에서는 증세를 해서 하면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지금 그 말씀 하시는데, 금리는 인하시키고 LTV·DTI 완화해 가지고 부채는 부채대로 늘고, 가계부채는 늘고 이율배반…… 거기에 가계부채를 가진 서민들은 죽고 이런 엇박자 정책을 계속하시잖아요. 이걸 또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세수 부족, 또 추경 어떻게 메울 겁니까? 국채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뭐로 할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학용 의원** 그러면 아직도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도 결론을 내서 곧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부총리님, 저는 오늘 확실히 좀 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한답니다’ 알려 주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심층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세수 부족이 얼마나?’ ‘모른다’ ‘경제성장률 4%로 해 가지고 해 봤는데 지금 3%도 안 되겠는데 세입 부족이 더 많을 거다’ 그다음에 ‘경기활성화하는 데 얼마만큼 더 들 거냐?’ ‘그것도 아직 추계 못 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에 보고드릴 상황이 아니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제가 통계를 하나 보면 우리 국가 전체 부채가 GDP 대비해서 국가부채는 한 32%라고 그리고 가계부채는 거의 한 83% 됩니다. 그런데 외국을 보면 국가부채는 가계부채랑 거의 비슷합니다, GDP 대비 국가가 80%면 가계부채도 한 80%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국가부채는 적고 가계부채는 엄청 많습니다, 한 3배 정도 되니까. 그건 뭐냐? 건강, 복지에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그 투자 안 하는 만큼 개인이 그걸 소비해야 되니까 가계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총리에게 이 말씀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정말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곳이 완전히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보여 주는 저 좌표입니다.

저기 한번 보십시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가계부채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자꾸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데 제가 부총리와 벌써 입씨름한 세 번째 하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신학용 의원** 이번에 예결위에서도 또 한 번 입씨름할 겁니다마는 인식해 주시고 빨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치·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저희도 가계부채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계속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다 하는 점을 계속 점검해 가면서 관련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지금 해외에서는 난리입니다,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난다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신용등급기관들이……

**○신학용 의원** 보고서를 제가 보여 드려야 되는 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하여튼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신학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을 출신의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경 의원** 새누리당 소속 수원 권선구 정미경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국민을 대신해서는 우리나라, 우리 국민 잘 부탁드립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에 우리 경제에 대해서 밝은 전망이 있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대호황에도 국내 경제는 침체해 있었고 지금도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근본적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져서 저희도 그것에 기인하기도 했지만 수출이 어렵고, 수출이 어려우니까 또 안에 여러 내수의 문제도 생기고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도 많아지고, 또 특별히 산업구조가 변경되면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 결국은 국가의 성장동력이 이제 한계에 왔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한계에 왔다기보다도 많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지만,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제 성장동력이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만큼은 갈 수가 없을 것 같고, 키워질 때까지는 우리 경제가 살아남아야 하는 전략을 저는 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이요, 저도 엄마니까, 가정 살림을 하는 사람이니까 국가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하는 것이 세수와 함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 급하면 막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 갖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뭐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거두어들인 세수를 사용할 때 지출이 적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누수가 없도록 적정한 데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 많은 국민들께서 분통을 터트리시는 지점입니다만 세월호 사건 때도 제대로 정부 대처가 안 되다 보니까 정부가 나중에 국가재정으로 돈을 쓰면서도 세월호 유가족으로부터 욕은 욕대로 먹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돈도 못 쓰고 또 한편에서는 재정 낭비를 걱정하는 국민들로부터 또 욕을 먹고,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국민들 사이에 이 돈 문제 때문에 결국엔 또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증세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식으로 재정을 집행하다 보면 사실 금방 바닥이 드러납니다.

이번에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로 저는 봅니다. 처음부터 정부가 조치를 잘했다면 돈 적게 쓰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았을 텐데 지금 또 이것 마찬가지로, 세월호랑 똑같이.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면서, 아니, 더 들어가고 있어요. 병원들 수익은 더 떨어지지요, 지역경제는 완전 바닥을 치고 있지요, 이제 와서 정부는 추경을 한다고 그리고 서민경제를 위해서 긴급 지원한다고 하는데 세월호 사건 때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이 감염병 체계에 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준비가 되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또 재정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재정을 또 투입해서 필요한 전문인력도 양성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충분히 되었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 여러 수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하게 못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인 점검을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될 돈이 있다면 투입을 해서라도 국민들의 건강,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메르스 사태는요, 저는 더 나아가면 또 이런 문제에 정부가 부딪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르스 환자와 그 가족들, 그다음에 메르스 병이 아닌 다른 병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 그다음에 우리 일반 국민들 사이에 또 분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미리 잘 심도 깊게 생각을 하고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의원 지금 대한민국에서 필요로 하는 총리의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 봤더니 저는 바로 지금 각 부처에서 마구잡이로 나가고 있는,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이 돈,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진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통제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 유념하고 그 부분은 사실은 국민들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조직의 시스템을 정말 효율적으로 하고 실질화해서 국민들의 그런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미경 의원 계속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최종하지만 우리 부총리께서도 좀 잘 들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장관께서도 잘 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동일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나중에 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 권선구 주민들께서 나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하여 제가 청원 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는 부천시·안산시·광명시·시흥시와 연합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비 총 913억 원, 국비는 174억 원, 도비는 22억 원, 시비는 617억 원, 채권 100억 원으로 사업비가 이미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 약 11만 평 규모의 종합장사시설, 그러니까 화장장, 장례식장 다 포함해서 그런 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6개 마을에서 대표적 혐오시설인 화장장을 서로 유치하겠다고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님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수원 권선구를 경계로 하고 있는 화성시 매송면 속곡1리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일단 먼저 전반적인 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경쟁적으로 유치 신청을 한 이유는 화장장이 들어서는 해당 마을 주민에게 50억 원 이내의 마을발전기금을 주고 화장시설 수익금의 5~10% 정도 주민들에게 그 수익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부여하고 시설 인력으로 마을 주민 우선 채용, 장사시설 2km 이내 지역 마을숙원사업으로 100억 원을 지원하고 해당 읍·면에는 150억 원 수준의 기반시설과 주민복지시설 건립이라는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치 경쟁이 있었습니다.

반면 지금 현재 선택된 그 속곡1리와 인접한 수원시 권선구 금호동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거기 주민들 앞으로 약 1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혐오시설의 불편함을 그대로 받고 있는 이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아무리 반대의견을 해도 그냥 경기도에서 흑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물론 저도 반대합니다. 우려하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님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화장장 설치를 추진하는 화성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입니다. 나머지 4개 연합체 시장들도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입니다. 인접한 수원시장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입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장께서는 수원 권선구 금호동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에서 통과시켰지요? 남은 절차는 마지막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화장장을 추진하고 있는, 장례식장 포함해서 이 화장장을 포함하고 있는 화성시장, 현재 화성

시장은 시장에 취임하기 직전까지, 처음에 최초로 시장이 되는 그 직전까지 장례식장을 운영하던 대표였습니다. 법인 명의로는 주식회사 효원장례문화센터, 그 시장의 처음 홍보자료에는 효원CTS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서는 이 지역과 불과 몇 km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효원장례식장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2001년 9월 24일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시장으로 당선되어 취임을 한 2010년 7월 1일이 지나 2010년 7월 12일 대표이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12일 채동석이라는 사람이 법인의 대표로 취임하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채인석 시장의 친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시장에 취임한 후에도 시장인 채인석의 인사말을 3년간 방치해서 영업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현 화성시장인 채인석 시장이 마치 효원장례식장의 지금도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화성시장이 추진하는 화장장 시설에 대해서 유치를 신청했던 최종 후보지 두 곳 중에서 최종 후보지가 된 곳은 이 장례식장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아니한 숙곡1리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신면 궁평2리는 수원의 호매실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효원장례식장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우연인지 아닌지, 의도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최종 후보지는 효원장례식장과 가까운 매송면 숙곡1리가 선정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장례식장을 운영했던 시장이 해당 연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부적절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경기 서남부의 장사시설 때문에 여러 부처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해서 관계부처로 하여금 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경 의원** 특히 어떤 부분에 수익이 나는지 잘 아는 전문가가 지자체장이 돼서 사업을 추진

하는 것, 같은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것은 아무리 감시를 정부가 잘 해도 이게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원 감사나 검찰의 수사는 모두 사후에 취할 수 있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사전 예방적으로, 이렇게 의심이 있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국가는 지금 재정을 쓰려고 하고 있고, 충분히 검토될 것은 지금 해당 정부 그 부처밖에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관행대로 다 했다. 뭐 경기도에서 넘어왔으니까 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문제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완전히 또 사후약방문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관계부처에 당부를 하겠습니다.

○**정미경 의원** 화장장 설치가 법적으로 옳으니, 시도 간에 협의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지자체 단체장에게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 보이면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잘 살펴 주셔서 현명하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미경 의원** 복지부장관께서 오시면 오늘 제가 질문할 사항인데 오늘 복지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으셔서 제가 국무총리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장 설치를 꾸준히 추진해 왔었고, 서울에는 두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립승화원·서울추모공원. 수원에는 연화장이 있고요, 인천·성남의 각 한 곳에 화장장이 설치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역 간 문제가 있는 화장장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할 정도로 화장장에 대한 수요가 많은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히 성남의 경우에는 서울추모공원이 들어선 이후 수요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인접한 우리 권선구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장장을 설치해야 할 그런 시급한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그 부분도 함께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한번 살펴보도록 관계부

처에 당부를 하겠습니다.

○정미경 의원 고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잘 들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잘 들었습니다.

○정미경 의원 이렇게 좀 이상하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 걸러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장관님께 달려 있습니다.

화장장이 설치되는 지역은 다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좀 찾아봤는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심사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해소에 대한 합의가 먼저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하면 그 합의 대상을 주민대표인 수원시장으로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 권선구에 있는 금호동 주민들, 피해를 보고 있는, 불지도 모르는 그 주민들로 보고 계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일단 단체장, 시장 또 구청장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정확히 대변을 해서 협의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수원시장께서 화장장 설치에 찬성을 한다면 화장장 설치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사실은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절차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미경 의원 그러면 그냥 수원시장의 화장장 설치를 만약에 주민 뜻대로 받아서 반대를 한다면 그러면 화장장 설치 안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그게 현재로서는 협의를 해서 그것이 이제 잘 안 되면 일단 시·도지사—이 경우는 이제 경기도가 되겠습니다—가 검토하고 조정을 하고, 또 이것이 화장장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의견도 들어서 그렇게 되고 검토와 조정이 되어야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조정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정미경 의원 그러니까 장관님,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인접지인 금호동은 수원시 전체로 봐서는 외지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8만 명

정도 주민들이니까요. 혹시 수원시장께서, 수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원시장이 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안해서 지금 여쭙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 의사와 상관없이 그 해당 지자체, 여기서는 수원시장인데, 수원시장께서 화장장 설치를 찬성하는 경우에 그러면 인접 주민들의 주민투표로 또 의사를 반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수원시장뿐만 아니라 그 해당 기초단체인 권선구청장에게도 이것의 협의 의견을 좀 밝히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초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미경 의원 장관님, 그거 너무 감사한 말씀인데요. 사실 권선구청장은 서울하고 달라 가지고 수원시장이 임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장과 의견을 같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측컨대.

사실은 누구보다도 권선구청장이 직접 이해당사자 주민인 금호동 주민들의 의견을 잘 앞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장님의 뜻대로 움직여서 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해당 구…… 제가 잠시 기초단체라고 잘못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수원시 전체가 기초단체입니다마는 그 해당 구의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을 왜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내의 의견 수렴이, 공청회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미경 의원 그러니까 수원시장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민들이 거의 다 반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것을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좀 마련해서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직접 나서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충분히 참조를 하고 또 경기도가 이것을 조정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조정하는

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그러한 협조 공문도 보내고 이런 것이 투명하게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방안을 좀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의원 경기도에서는 주민들 의견조정 못 했고 그냥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의견조회 공문을 해당 단체인 수원시장 또 수원시 권선구청장에게 이미 한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현재.

○정미경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최경환 부총리님께서는 그냥……

지금 들으셨지요? 여기에 이렇게 지금 의심이 많이 있으니까요, 재정 지원하실 때도 좀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평택 소재 병원에서 최초 메르스 검사 요구를, 질병관리본부에 검사 요청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 요청을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족들이 난리를 치니까 재검사 요청을 또 해요. 그랬더니 질병관리본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메르스가 아니면 해당 병원 너희가 책임져라’ 이렇게 단서를 달고 메르스 검사를 했다는 YTN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국민들께서도 제일 이것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검사를 미룰 정도면, 그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메르스 판정이 아니라고 하면 그 담당자가 불이익을 받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알기로는 어떤 건에 대해서 이익·불이익을 주려고 그러면 그 판단이 정확했는가 또 과오가 있었다면 과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확인을 한 뒤에 판단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정미경 의원 그러면 불이익 주는 것은 있나 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명백한 행정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지금 사안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안을 놓고 가타부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미경 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처음에 최초로 요청을 했을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면 조치가 더 빠를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게 혹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문제 때문에 다 이렇게 시기를,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이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복지부동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사태를 너무나 키워 버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복지부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총리 된 직후에 이 메르스 대책에 대해서 선제적 조치를 취하라, 선제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실에서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어서 만약 그런 복지부동 사례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에 적절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이번 기회를 또 계기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도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의원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부의장 정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부천 소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입니다.

작년 세월호 참사라는 대형 재난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이게 정부냐’라고 통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확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대개조 작업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지금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부채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메르스, 가뭄, 가계부채와 주거 불안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또다시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이게 정부냐'라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및 역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지적하고자겠습니다.

메르스와 가뭄, 민생 파탄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국민들의 걱정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국민들은 새 총리가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역대 가장 많은 의혹을 받고 해명되지 않은 채 총리로 취임하셨습니다.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야당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정에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늘 소통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국정 수행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화장시설이 장사법에 따른 지자체 의무 사항임에도 경기 서·남부권에 화장장이 없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파악이 잘 안 됐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아까 오전에 질의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래서 충청도로 원정 화장도 가고 최대 20배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언제나 넘비 현상 때문에 좌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지자체가 지난 2011년부터 공동화장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넘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유례없는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넘비 현상이 있자 경기도가

중재자가 돼서 중재안을 수립했고 다섯 개 지자체는 이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모두 이행한 바 있습니다. 인근지역의 땅값에도, 주민들의 건강에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서 최종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넘비 현상은 정치적·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메모리얼파크 사업은 지자체가 연합해서 이러한 넘비 현상을 극복한 아주 모범사례입니다. 중앙정부가 차일피일 미루고 눈치를 보면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지역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총리님, 불필요한 갈등과 혼선을 빨리 막고 경기도 서·남부권에, 이 다섯 개 지자체나 됩니다. 이 다섯 개 지자체의 숙원사업, 이 모델이 되는 훌륭한 모범사례를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메르스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인사청문회 당시에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제때 해야 할 일을 다 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말씀을 하시고, 보고를 들으시고 조치를 취하셨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김상희 의원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일의 정도에 관해서는 여러 생각들이 계시겠지만 필요한 일들을 필요한 때에……

○김상희 의원 대통령이 초기 대응을 잘못했는데…… 초기 대응을 잘했는데 초동 대처가 실패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께서 국정의 모든 일에 다 개입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필요한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 가는데 그것이 점점 예를 들어 악화된다든지 잘 조치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그 상선이 나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국정 시스템입니다.

○김상희 의원 전염병으로 인한 재난은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초동 대처, 이때가 골든타임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김상희 의원 이때를 놓치면 굉장한 재난으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초동 대처가 잘못됐다고 애

기하셨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초동 대처에…… 예, 초동단계에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상희 의원 초동 대처 잘못하셨다고 답변하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김상희 의원 초동 대처를 잘못된 것은 대통령께서 초기에 제때 할 일을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확진자 발생하고 6일 만에 국무회의에서 대면보고 받으셨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6월 3일에서야 메르스 대응 긴급회의 여셨습니다.

초동 대처를 못 해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대통령의 이러한 메르스에 대한 안이한 사고 때문입니다. 잘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잘못하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결과적으로 더 빨리 그런 대응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태에 대한 대처는 현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악화되면 또 그에 상응한, 위에서 챙겨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일련의 절차들에 관해서……

○김상희 의원 총리께서도 너무 이것을 파악을 못 하시는군요. 이 전염병에 의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동 대처를 잘해야 되고……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물론입니다.

○김상희 의원 초동에, 그때가 골든타임이고 그때 대통령이 확고하게 현장부터 챙겨야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초동단계 때 환자가 한둘 생겼을 때 그 모든, 소위 감염병 환자가 생겼을 때마다 장관이 나서고 총리가 나서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이 보니까 중한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장관도 나서고 또 총리대행도 나섰고 또 총리도 나서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봐서 그때 나셨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일이라고 하는 건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김상희 의원 제가 말하는 골든타임인 초동 대처, 초동 대처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초기대처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단계마다 좀 다 차이가 있지요.

○김상희 의원 말씀을 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를 들어서 발병을 했다고 그러면 우선은 진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진단을 해 보니까 또 환자가 한둘이 아니라 좀 늘어났다 그러면 같이 협업해서 진단하고 원인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초동 대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러니까 지금 총리께서는 총리 취임하신 지 며칠 되셨고 또 그동안 많이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셨을 텐데 준비가 너무 안 돼 계십니다.

지금 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전염병에 대한 준비가 안 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초동 대처에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병원, 지자체, 국민이 긴밀한 협조 속에서 역학조사와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긴급하게 초동 대처를 해야 되고 이것이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 때문에 이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핵심이 정보 공개였습니다. 정보 공개가 며칠날 됐지요, 병원?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상희 의원 병원 정보 공개 며칠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정보 공개한 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희 의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6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6월 7일인지 8일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6월 7일이지요? 메르스 첫 확진 이후 18일입니다. 병원명을 그때까지 공개를 안 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어떻게 역학조사와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역학조사나 또 치료는 공개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치료에 핵심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염병이고 번져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도 같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 이런 단계가 되니까 이것은 그냥 병원에서만 치료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알고 대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단계가 돼서 정보 공개를 하게 된 것인데 그 시점을 언제로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은……

○김상희 의원 그러면 그 시점이 18일은 맞았어

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시점을 언제로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은……

○**김상희 의원** 확진 이후 18일이 맞느냐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건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이 조금 더 일찍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면 그것이 처음 5월 20일 확진자가 나왔을 때 바로 공개해야 되느냐 이걸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의원** 총리 참 걱정됩니다.

정보 공개가 적어도 병원 의료진 간에, 지자체 간에…… 그렇지요? 중앙정부 간에 빠른 속도로 이것이 정보 공개가 되고 소통이 되고 그리고 국민들께도 알려져야지 이게 제대로 된 조사와 방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의원님의 그런 기본적인 인식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지금……

○**김상희 의원** 그러니까 시기가 18일 만이라는 게 말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감염병 때문에 정보 공개를 한 사례가……

○**김상희 의원** 매뉴얼의 기본이, 가장 기본이 정보 공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매뉴얼의 기본이 정보 공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매뉴얼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잘 보고……

○**김상희 의원** 그걸 지금도 모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매뉴얼의 공개 시점에 관해서는 제가 검토해 보지는 못했는데 그것이 과연 매뉴얼에 있는지……

○**김상희 의원** 그러면 지금도 약간 늦어서 아쉬운 감이 있다 이런 정도로 사과, 인식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더 빨리 되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러면 왜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왜 이렇게 늦게 됐을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감기나 이런 것들, 독감 같은 것들도 일종의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어떤 독감이 걸렸다고 그래서 정보 공개하고 이렇

게 해 오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이게 메르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이런 병인 것이 좀 우리가 뒤늦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리면서 공개의 필요성이 생겼고, 그걸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김상희 의원** 참 걱정입니다, 정말.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김상희 의원** 총리가 지금 이 시점에도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정보 공개가 늦은 것에 대해서 모든 곳에서 지금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김상희 의원** 그리고 정부가 지금 메르스 진원지가 되기를 꺼려하는, 재벌 병원인 삼성병원의 입장만을 고려해서 계속 정보를 은폐하고 정보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긴급브리핑에 떠밀려서 공개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공개가 좀 뒤늦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또……

○**김상희 의원**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늦게 공개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처음에는 감염병에 대한 낙인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김상희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하지 마시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그런 것 때문에……

○**김상희 의원** 그러니까 잘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추측하지 마시고……

○**국무총리 황교안**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낙인효과나……

○**김상희 의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 필요하지요, 왜 이렇게 정보 공개가 늦어졌는가에 대한?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이 사태가 정리가 되면 그 과정에서 정부의 조치 또 병원의 조치들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의원** 지금 확진자 172명 중 삼성병원에서 나온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한 반, 80여 명, 80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83명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김상희 의원 그중에서 관리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몇 명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관리대상자가 아니었던 사람도 50여 명, 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점에 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김상희 의원 지금 총리께서는 전혀 이걸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김상희 의원 왜 이렇게 삼성병원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하는 데 대해서……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이미 알려졌지만 방역조사단이 정부에서 파견되어 나가 있고 또 총리실에서도 점검조사단이 나가서 경위들을 조사하고 있고 또 대처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정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아마 저희 판단의 결과들을 가지고 필요한 조치들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희 의원 지금 드러나 있는 것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총리는 그것도, 국민들이 아는 것만큼도 모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제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김상희 의원 그럼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조사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런데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느 부분을 말씀을……

○김상희 의원 알고 계신 만큼 답변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어느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요?

○김상희 의원 왜 이렇게 됐느냐고요? 왜 이렇게 관리대상자가 51명이나 빠져 있었느냐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초기에 소위 역학조사를 누구에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제가 이 일에 인발브(involve)된 뒤로는 좀 광역으로, 넓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판단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아마 의학적인 판단도 있었고 또 다른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김상희 의원 총리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들이 생겼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게 아니라 초기에 삼성병원의 역학조사와 방역을 삼성에게 맡겼고 삼성은 이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6월 14일 권덕철 총괄반장은 ‘삼성병원장이 감염내과 전문의이고 충분히 파악해서 관리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리, 삼성은 치외법권 구역입니까?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병원입니까? 왜 국가가 맡아야 될 그런 방역업무를 삼성이 맡음으로 해서 이런 재난을 만들어 내는 겁니까? 왜 삼성이 국가 방역망에서 열외가 됐습니까?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김상희 의원 이 결정을 누가 한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삼성이든 또 다른 병원들이라 하더라도 초기에 그건 다 그 사람들이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니까 아마 자체조사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보면 그건 좀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리실의 점검·조사단이 현장에 나갔고 또 복지부에서도 방역 점검을 하기 위해서 특별팀이 만들어져서 나가서 그 뒤에는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국가가 맡아야 될 방역업무를 삼성이 맡게 돼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직까지 정확한 계수가 나오지는 않았습시다마는 아마 10조대에 이르는 그런 큰 피해가 있었다 이런 보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지금 8월이나 돼야 종식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손실액이 20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근로자 등



국민 개개인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6월 17일 박 대통령은 송재훈 삼성병원장을 불러서 삼성병원 측의 뒤늦은 정보 공개와 방역관리 소홀 등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서 질타했습니다.

총리,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것이 감염병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가 됐어야 되는 이 점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하시고 또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광범위하게 그렇게 조치를 해라 이런 뜻의 전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희 의원** 대통령한테 사과를 했는데요, 지금은 대통령이 병원장한테 사과받을 단계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할 때입니다.

삼성의 잘못은 분명하고 이것을 명명백백히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마땅히 정부가 해야 될 책임조차 삼성병원에게 슬쩍 떠넘기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오만한 재벌 병원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콜라보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사태가 이번 메르스 사태입니다.

초동 대처에서 미흡해서 현 상태까지 이른 것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또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리고 대통령의, 골든타임을 놓친 대통령의 진정한 대국민 사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정부의 책임을 맡은 입장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실 것으로,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상희 의원**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각별하시다고 하는 건 알지만 대통령 사과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전세대란인 거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전월세에 관해서 국민들이 어려움이 많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박근혜정부 들어서 얼마나 폭등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노무현 정부 때 4배, 이명박 정부 때 2배 폭등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박근혜정부 들어서 폭등한 겁니까.

총리님, 1987년 이후 우리나라 전세대란은 세 차례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자료를, 저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87년, 97년, 2008년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전세대란은 과거의 전세대란하고 원인과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들이 전월세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부도 여러 가지 온갖 노력들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원인과 양상이 다르다고요, 이전의 전월세 폭등하고는요.

알고 계십니까? 전혀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이시지 않았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가계부채를 개선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노력 중에 구조조정의 노력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출을 좀 용이하게 하면서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 점이 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구조조정의, 넓은 범위에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왜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요? 박근혜정부 들어서의 전월세 대란의 양상과 원인이 다르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전하고 다른 것이 지금 환경이 초저금리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월세로 지금 대거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그래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의 정책도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이 엄청나게 달라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많이 노력을 해 가면서 조금씩 완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공급을 많이 늘리고 있고, 또 월세 시장이 복잡할 때는 월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과의 협력이나 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등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실제로 결과적으로도 공급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채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전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김상희 의원** 지금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도 우리 목표치에 현저하게 미달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월세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질 때는 전월세 시장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임대차 관계의 조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차갱신제도, 표준임대료제도, 분쟁조정제도, 인상률상한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어서 임대차 시장의 시장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전월세 대란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계속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어느 부분을 반대한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모르겠는데……

○**김상희 의원** 특히 임대차갱신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임대차갱신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상한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희 의원** 임대차갱신제도와 인상률상한제 두 가지를 다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작용과 부작용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세입자들과 야당이 요구한 지가 수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정부가?

○**국무총리 황교안** 임대차 상한을 제한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지장이 생기게 되고 또 임대 가격이 오르게 되는 그런 선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김상희 의원** 언제 선례가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과거에 제가 듣기로는 두세 차례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 검토가 된 뒤에야 가능하지, 그것 때문에 거꾸로 또 서민들이 임대차 시장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1989년 12월에 임대차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때 전세가 인상률이 16.8%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전세가는 거의 20%에 육박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률상한제를 실시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인상률 폭등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국토부가 부랴부랴, 아무런 근거가 없이 주장만 해 왔는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거기를 보면 임대차계약 갱신과 그리고 전월세상한제를 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12% 정도 오르게 될 것이라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전세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오름폭이 높았기 때문에 그것하고 크게 상이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김상희 의원** 집값에 비해서 전세 비율이……

○**국무총리 황교안** 전세 비율이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많은 곳은 육칠십 %까지도 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심지어는 90%까지 가는 데도 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김상희 의원** 예전에 전세가율이 40%, 50%였던 때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폭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연구도 없이 지금 현재 이런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 계약기간 연장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이런 모든 것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논의되었던 것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또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상황이 어떤지, 실태가 어떤지 한번 검토해 보는 것에 대해서 주무 부처에 협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지금 전월세난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삼중고 속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무책임과 무능, 불통 그리고 독단과 아집의 흔적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인내는 한계치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김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출신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 원주출신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저물가·엔저라는 신 3저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감소되어 성장 잠재력도 줄어들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도약이나 정체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 다시 한 번 한강의 기적을 이뤄 보자는 취지에서 준비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우선 총리로 부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감사드립니다.

○**이강후 의원** 많은 국민들이 기대가 큼니다. 많은 업적을 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고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내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 구체적 수치를 보면,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전달보다 5포인트 떨어진 75포인트를 기록하며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 상황이 일시적 부진이 아닌 구조적 저성장, 즉 디플레이션 국면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디플레이션 걱정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 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이처럼 어려운 내수 상황 속에서 수출마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수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 지난달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0.9%나 급감해서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감소를 보이며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금년도 수출 전망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금년에 수출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수출 주도로 경제를 끌어왔는데 근년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국제환경도 좋지 못하고 또 세계 교역 자체가 지금 많이 둔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엔화 약세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수출 전망이 밝지 않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많은 걱정들이 계셔 가지고 정부에서도 지금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음 달에는, 7월에는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해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 수출 감소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

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저유가 기조의 장기화에도 한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환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후 의원 요즘 수출 기업들 사이에서는 북핵보다 더 무서운 게 환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본 적 있으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말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 그런데 4월 말 기준으로 우리 원화는 주요 32개국 중 작년 말 대비 세 번째로 높은 절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은 우리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통화 정책 및 환율개입 정책 등 정부의 고강도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이를 과감히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동안에 경제 담당 부처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환율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강후 의원 또한 본 의원은 우리 수출 시장의 27%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FTA를 부진한 수출 증가를 위한 돌파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동조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 13억의 중국 시장이 열린단 말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내수가 굉장히 부족한데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세계 시장으로 우리 기업들의 또 우리 제품들의 진출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큼니다.

한중 FTA 효과, 과연 어느 정도로 전망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한중 FTA로 GDP 추가 성장이 1% 가까이, 0.96%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

고 또 일자리도 5만여 개가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가 책임 있게 조금 더 점검해 가면서 앞으로의 대중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강후 의원 그러니까 한중 FTA가 체결되고 또 비준되고 실시됨에 따라 가지고 혜택을 보는 부류도 있고 또 이에 따라 가지고 손해를 보는, 피해를 보는 산업도 있습니다. 특히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나 국내 산업에 대한 보완 대책의 마련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농민 보호를 위해서 양허 대상을 제한한 부분도 있고 또 FTA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또 신사업 진출에 애로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강후 의원 반면에 한중 FTA 위험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산업 고도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하고 유사하거나 우리를 뛰어넘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 거대 중국 시장이 우리에게 캐시카우(Cash Cow)임에는 분명하나 국내 산업의 잠식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선제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개개 기업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민관이 협력을 해서 빨리 경쟁력을 키워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정부는 괜찮다, 걱정 없다 하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매우 큼니다.

새로운 총리가 취임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취임 후 최우선 과제를 경제 회생에 두고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액션 플랜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경제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한 고려를

하고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후 의원** 다음은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전은 지난 37년간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에너지 측면에서 원전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었고 또 앞으로도 할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습니다.

○**이강후 의원** 그런데 호사다마라 할까, 이와 함께 사용후 핵연료가 각 발전소에 대량으로 쌓여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사용후 핵연료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고 또 임시 저장시설이 언제 썸이면 포화에 이르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사용후 핵연료가 1만 3800t이 원전 내에 임시 저장된 것으로 알고 있고, 원전 내의 저장 용량을 확충한다 하더라도 24년까지는 포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사용후 핵연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입니다, 저장 시설은.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방폐장을 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89년 경북 또 91년 안면도 또 95년 굴업도, 2003년 부안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도를 했으나 엄청난 혼란과 사회적 비용만 낭비한 채 방폐장 건설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교훈으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또 20개월간의 공론화 과정 끝에 드디어 권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12일 언론에 내용이 공개된 데 이어서 16일에는 본 의원이 주최한 대국민토론회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혹시 총리께서는 권고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뭐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느냐고……

○**이강후 의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혹시 못 받으셨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권고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까지 들었고, 그 내용 자체를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달 말에 아마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 예, 드래프트(draft)가 나왔습니다. 권고안의 핵심을 보면 이제는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2020년까지 지하연구소 부지를 선정하고 또 2030년부터는 실증 연구를 해서 2051년까지는 처분시설을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금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법을 마련해야 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관련법 정비를 포함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계획에 대해서 가급적 금년 말까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고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범정부적으로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부처들과 함께 협업하겠습니다.

○**이강후 의원** 과거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처분 시설 문제를 폭탄 돌리기 식으로 계속해서 다음 정부로 미루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이제는 우리 세대가 발생시킨 부담을 더 이상 미래세대로 전가하지 말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이 점을 명심해서 가지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실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원주 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성남-여주 간 전철은 금년 말에, 그리고 원주-강릉 간 전철은 2017년 말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여주-원주 간 21.9km만 미싱 링크(missing link), 즉 단절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총리께서 보셔도 이가 빠진 것처럼 보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이강후 의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꼭 연결해야 한다고 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 있지요,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도교통망을 보면 남북 간 철도는 다 연결됐는데 동서 간 철도망은, 정부 수립 60년이 됐는데 아직도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는 국가 동서 철도망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총

리님도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부분이 보다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강후 의원** 정부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껏 예비타당성 조사만 2년째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 언제쯤 발표가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시기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전체적으로는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 강원도는 산이 많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고 수익이 낮아 가지고 경제성만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통과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여주-원주 전철사업은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국가 동서 철도망을 완성하는 사업이자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또 원주민과 강원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점을 명심해서 가지고 여주-원주 전철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강후 의원** 그리고 관련 부처인 경제부총리님,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님도 제 질문 내용을 잘 들으셨지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 관광산업과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 상황이 미흡합니다. 정부 예산이 삭감되고 또 관련 기관 간의 원활하지 않은 협조 체제로 과연 2년 8개월밖에 남지 않은 동계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총리 취임 이후에 아주 급한 현안 때문에 그 부분 다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마

는 아주 급한 일이 좀 지나면 평창올림픽 준비 상황에 대해서 총리실 차원에서도, 그동안도 계속 챙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행사가 정말 온 우주의, 온 지구의 큰 축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후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와 주시지요.

다음은 규격 미달의 중국산 철근 유통과 관련하여 우리 국토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KS 인증을 받은 중국산 철근이 KS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철근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철근의 유연성을 테스트하는 인장강도에서 중국산은 KS 기준인 16%에 무려 3%나 미달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또 철근 중량 실험에서는 KS 기준보다 무려 1m당 170g이 부족해서 30평대 100세대 아파트 한 동을 지을 때 무려 55t의 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불량 철근이 건설자재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말씀하신 대로 건설공사에는 KS 인증품이나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인받은 자재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저렇게 기준 미달 제품이 일부 불법으로 납품되고 있는데 저것은 엄연히 불법이고, 방치가 아니라 아마 아직까지 제대로 단속을 못 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강후 의원**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 푼이라도 단가를 낮추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값이 싸다는 이유로 규격 미달의 불량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이강후 의원** 장관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를 들어서 KS 인증을 받고도 불량 철근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도 불량 자재가 반입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관리는 산업부가 담당입니다만 인증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후 의원** 본 의원은 수입산 불량 철강재 유통을 막는 방법 중의 하나가 원산지 표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토부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국토부가 무엇보다도 국민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개정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우선 관계자들 의견을 좀 수렴하고요, 국제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마찰 관련 가능성이 있지는 않나 하는 걱정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하여튼 의원님의 뜻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강후 의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지지요.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좀 나와 주실까요?

첨단의료기기 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첨단의료기기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이강후 의원** 의료기기를 수출하려면 국제기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허가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전문인력도 부족해 가지고 수출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이강후 의원** 대표적인 의료기기산업 도시인 원주에 국제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기 인증원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강후 의원**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이강후 의원** 저도 동감입니다.

장관계서는 원주 의료기기인증원의 건립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우선 지금 인증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그 안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인증기능을 확충해서 우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증센터나 인증원이든 이쪽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강후 의원** 바로 어제 정부가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인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이강후 의원**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는데 서민경제가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산업부의 이번 조치는 서민부담을 덜어 주는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왕 내친 김에 가스요금도 인하해 가지고 서민가계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지금 가스요금은 원료비연동제에 따라서 올 들어 세 번에 걸쳐 22%를 인하했습니다.

현재 지금 가스요금은 ±3% 가격 변동이 있을 때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하요인도 인상요인도 없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추가적 인하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 그런데 또 다른 한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의 지역 간 격차가 매우 심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서 도시가스의 평균 공급비용이 4배나 비쌉니다.

제가 원주를 보니까 원주시민들이 서명도 받고 그래서 저에게도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지방 이용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의 차이를 줄여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전기요금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같은데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더 비싼 가스를 쓸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이유야 그 공사비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모든 국민에

게 평등한 혜택을 준다는, 복리를 준다는 차원에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도매요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각 도시가스사가 공급할 때 공급비용의 격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가 마지막 공급을 하기 때문에 한전하고는 다른 그런 공급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가스요금, 도시가스 요금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후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이 힘을 모아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이한 박근혜정부는 국민적 역량을 총결집해서 대내외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 나가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반드시 이루어 내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이강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신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기준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재벌기업으로만 돈이 몰려서 서민경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자율에만 맡겨서 해결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양극화의 개선이 없다면 경제활성화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저는 이 물음을 중심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로 론스타 관련 투자자·국가 간 소송, 일명 ISD 문제입니다.

국민세금 5조 원이 증발할지도 모르는 일인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으니 가만히 있으라고만 합니다. 소송에서 지면 돈을 내는 것은 국민인데 말이지요.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론스타 관련 ISD 건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을 갖고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진행 상황, 심리가 열린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중재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염려해서 또 당사자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 간에 협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소송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의원** 지금까지 정부는 일체의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소송에서 지면 배상금은 누가 부담하지요?

소송 담당자들인가요, 아니면 국민인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결국 이겨야 되는데요, 이겨야 되는데 지게 되면 정부에서.....

**○김기준 의원** 당연히 국민 부담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정부에서 국민 부담으로.....

**○김기준 의원** 사인 간의 소송은 어차피 자기 돈을 쓰는 문제이니까 외부에 재판내용을 공개 안 해도 상관없지요. 하지만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은 패하면 국민들이 그 돈을 물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가만히 있으라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국민의 세금을 5조 원씩이나 가져다 쓰는 문제인데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겠다 하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총리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ICSID에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중재재판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재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외부 공개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이 중재재판 자체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역량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의원** 국민들은 세월호 때도 가만히 있었고 메르스 때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ISD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에 빠져 죽는 것도 국민이요, 감염병에 걸려 죽는 것도 국민이고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하는 것도 국민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가만히 있으라고만 합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정부는 ISD에 대해서 언제까지 비밀에 부칠 작정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 진행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국민들에게 죽 드리고 있고 중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소송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국제소송의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 때문에 재판 내용의 공개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 만일에 비밀에 부치는 이유가 총리 말대로 국익을 위해서라면 소송에 유리할지도 모르는 외부 조언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송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필요성과 소송을 자기들끼리만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언조차 안 들겠다면 이는 소송을 짜놓은 각본대로 끌어가겠다는 것이겠지요.

정부는 외부의 조건을 경청하고 이를 소송에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규정이나 재판의 룰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의견을 좀 듣는 이런 방법에 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기준 의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조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ISD는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에 따라 개시되었습니다. 이 협정에 의하면 적법한 투자자만 보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3월에 있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가처분결정에 따르면 론스타는 최소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로서 외환은행의 적법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지요.

이것이 그 판결문입니다. 이 기간은 론스타가 HSBC와 매각승인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2007년이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총리는 이러한 법원 판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판결에 대해서 아마 지금 팀에서, 대응팀에서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의원** 이 판결은 이미 론스타가 한국을 떠난 이후에 내려진 것이라 지금까지는 큰 의미가 없었지만 이번 ISD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피해 가기 위해 금융 당국에 신고했던 투자자를 바꿔치기까지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살펴보면 모두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를 통해 론스타가 적법한 투자자가 아니라는 점만 입증되면 이번 소송에서 국민들이 해외에 세금을 퍼 줄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조언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고 ISD 활용 여부를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지금 총리실에 준비단이 만들어져 있으니만큼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 우리 총리께서 직접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판결문 말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나간 먹튀 자본에게 국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쥐어서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당국자들의 이익이 아닌 국익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지금 준비단과 또 대응팀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각오와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익을 위한 재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경제 현황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낙수효과'라는 말을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김기준 의원** 낙수효과란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해서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모두 함께 잘 살게 된다, 이러한 애깁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도 이런 낙수효과 모델에 기반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특정한 효과나 어떤 현상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경제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종합적으로 봐서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해서 국가의 부가 축적이 되고 이것을 또 경제적 약자들과 소외된 사람들, 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큰 방향의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주장했던 ‘줄푸세’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의원** 그게 바로 낙수효과에 근거한 것 입니다. 그리고 그 입장을 아직 바꾸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수효과에 기반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로서는 여러 지적이나 평가들에 대해서도 유념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부분들은 또 반영을 하고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을 해 나가면서 경제정책을 운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의원** 낙수효과 모델은 과거에는 통했는지 몰라도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5일 IMF는 150개 국가의 30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부유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성장률이 감소하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성장률이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소득분배를 개선하면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애깁니다. 이제는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IMF의 결론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낙수효과 모델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경제정책 기조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꾼다고 하는 문제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꾸는 것이 과연, 바꾼다고 하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오고 또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는가에 관해서 왕도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준 의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모아서 경제정책을 세우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김기준 의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못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기조를 바꿔야 된다면 바꿔야 되겠지요.

IMF 결론은 간명합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라.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같습니다.

총리 들어가시고 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소득을 올려야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열매가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고도성장기 9%에서 MB 정권 이후 2.9%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기업소득 증가율은 9.5%로 가계소득 증가율의 3배가 넘습니다. 기업과 가계소득의 격차는 역주행한 8년 동안 6.7%p까지 벌어졌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나 천문학적인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문제도 바로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문제의 이면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경기회복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는데, 부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우리나라뿐 아니라 최근 2008년,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에서 가계소득보다는 기업소득 위주로 늘어난다 하는 그런 지적이 죽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처음으로 바로 시도한 것이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게 임금 인상에 대한 혜택 그리고 배당에 대한 혜택 그리고 또 투자에 대해서 기업들이 사내유보를 해서 투자로 적정하게 환류를 시키지 않으면 추가적인 과세를 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하게

사내유보가 경제의 부분으로 환류되도록 하는 그런 세제를 도입해서 지금 금년 초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소 효과를 나타내면 기업들의 사내유보도 좀 줄면서 임금이나 배당 또 투자 이런 것을 통해서 가계소득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의원** 기업의 영업이익은 2007년 185조에서 2014년 263조로 42%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36조에서 43조로 이익 증가율의 절반인 20%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가계소득은 508조에서 693조로 36% 늘었는데 소득세는 40조에서 56조로 38%나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법인세는 줄이고 소득세는 늘려서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습니다. 이게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조세정의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의원님, 어떤 통계를 인용하셨는지 제가……

○**김기준 의원**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요 기본적으로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을 올리고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세 부담을 조금 조금씩 늘려오는 추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췄고요, 그리고 새로운 세율구간을 38% 적용…… 최고세율을 내는 그 금액을 3억에서 1억 5000으로 낮춰서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그리고 또 법인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줄임으로써 조세형평성을 기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의원** 박근혜정부에서 법인세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오히려 서민들한테 증세를 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것은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법인세에 대한 여러 가지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 해 오고 있고요……

○**김기준 의원** 늘리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계속 해 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기준 의원**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환위기 이전 연평균 노동생산성은 5.9%, 실

질임금은 6.5%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생산성과 실질임금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주행한 8년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1인당 실질임금 상승률이 0.1%, 이러니 민생경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성은 느는데 임금은 제자리라……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에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들어와서는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제 쪽에서도 그렇게 이미 조치를 했고 또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적정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 하는 이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김기준 의원**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차이 그것이 바로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 차별과 배제 성장론이 가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평과 포용의 새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들어가지고요. 총리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낙수효과 모델에만 의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친기업정책만 펼쳤습니다. 이제부터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자고만 할 게 아니고 가계소득 증대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가계소득이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론입니다. 유능한 정부의 유익한 개입이 필요한 때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가계의 가치분소득을 늘려서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게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정부가 이끌어왔던 것은 그와 함께 전체적인 경제성장도 같이 이뤄가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준 의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경제정책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 정상화, 노동시장 정상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 확대 등이 그것입니다.

첫째, 법인세 정상화 문제입니다.

과세표준 500억 초과 대기업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22%로 내려갔던 법인세율을 25%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향후 5년간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늘어난 세수는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는 데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는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낮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김기준 의원 많이 낮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아직도 좀 높은 편이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제가 봤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에서 나온 것인가, 결국은 투자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충분히 검토하면서 경제정책을 세워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의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OECD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효세율이.

○국무총리 황교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기준 의원 다음, 노동시장의 정상화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입니다, 월급으로는 116만 6000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1만 원을 목표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200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한 빈곤퇴치 및 사회통합 정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른바 ‘최저임금 1만 원 5개년 계획’을 정부가 수립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일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이 생긴다면 한시적으로 소득장려세제라든가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지원책을 강구하면 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제안을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바로 할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몇 년 안에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은 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기본적인 방향은 의원님 말씀처럼 최저임금의 단계적인 인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의원 과거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투자 문제보다도 소득을 올리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5개년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정규직의 문제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조건을 향상, 안정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집행하고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 노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재정·세제상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 노동 또 경제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쉬운 결론이 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부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 정규직화할 수 있는 길들이 뭐가 있나, 어떤 형태로 가능한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 셋째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마련해 줘야 합니다.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은 이명박 정부 시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목표한 것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면 그것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려주는 초과이익공유제, 대기업이 더 이상 문어발식 확장을 못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제도, 공공조달 시 일정 부분 이상을 중소기업 발주에 의무화하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제 이들 정책과제들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항목의 법제화 말씀에 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의미가 있다, 공감되는 부분도 있다…… 다만 정말 의견이 다양하고 쉽지 않은 과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잘 검토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준 의원** 넷째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을 6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사회적경제기본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리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총리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의 필요성이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 아마 입법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결론이 나는 대로 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잘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 어렵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망가지고 있는 민생경제를 되살리려면 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과거 프레임의 연장선상에서 변죽만 울리는 정책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공평과 포용의 경제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제활성화를 원한다면 법인세 정상화, 노동시장 정상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대 등 네 가지 핵심과제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동구갑 출신의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동구갑 출신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입니다.

메르스에 맞서서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감염병 퇴치를 위해서 분투하는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르스 극복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희망인 전국의 의료인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 따뜻한 격려와 그리고 힘찬 박수를 보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메르스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이미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메르스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 방안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 느슨한 보고 체계와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화를 키워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리 임명 축하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감사합니다.

○**류성걸 의원** 메르스 사태 이후 지금까지의 정부 대책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 사태의 초기 대응에 좀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메르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질병 자체가 발생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 2012년에 처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에 그런 대책회의도 하고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이후에 초기 대응이 좀 미진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초기에 언론이나 여론의 또 국회의 여러 지적들이 계신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 신속하게 미비점들을 보완을 해 왔고 또 그 강도를 점점 더 높여 갔습니다.

지금은 얼마 전부터는 정부가 총력 대응체제를 갖추어서 민감하게, 광범위하게, 신속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어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은 국민들에게 큰 우려를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다만 많이 진정 추세가 있다 이런 분석도 계시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메르스 종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류성걸 의원** 지난해의 세월호 사고, 이번의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이 현재의 공공기관의 위기관리 시스템, 어딘가 모르지만 고장 나 있는 듯하다는 평가가 주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성걸 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지만 총리님께서 구상하시는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가의 재난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편을 했습니다. 재편해서 이 재난대응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하고 시험하고 훈련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우선 조기 종식, 빨리 끝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거진 감염병 분야에 관한 대책, 이 부분 사실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비롯해서 국가 질병관리 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이런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류성걸 의원** 예, 그렇다면 조금 전에 총리님 말씀대로 조기 종식을 위해서 정부와 의료진만의 노력으로는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국민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조기 종식을 위한 협조의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가 먼저 총력을 다해서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소 좀 불편하시더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보건소에 신고해 주시고 또 자가 격리가 되시는 불편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이분들은 꼭 격리 수칙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한 분이 어기면 크게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지켜 주셔야 됩니다.

또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편하고 참 힘든 일이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할 수밖에 없겠지만 병원에 방문하는 문병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계시니까 불가피한 것 외에는 병원 문병에도 자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태가 생긴 이후에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고 메르스 치료 일선에서 정말 사투를 벌이신 의료진들과 또 특별히 병원에서 고생하신 분들 그리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 격리의 불편을 감수해 주신 격리자분들에게도 저희 정부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하겠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격려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류성걸 의원** 예,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 침체와 메르스 사태에 더해 온 국토가 가뭄에 지금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대책이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경제부총리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본 의원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재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성걸 의원** 그러면 위기 대응에 관련되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우선은 지금 메르스하고 가뭄 관련해서는 응급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은 일차적으로 급한 조치는 취했습니다.

우선 메르스 관련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50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집행에 들어갔고요, 또 관련 업종의 긴급한 피해액 지원을 위해서 465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뭄에 대해서도 인력 장비 예산을 총동원해서 초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을 한 675억 원 정도 투입해서 급한 대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경제 전반에 특히 메르스 관련해서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 사태를 충분히 극복할 만한 재정정보강 대책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성걸 의원** 지금 재정정보강 정책이라고 아주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는 추경도 포함되는 그런 재정정보강 정책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추경을 포함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정보강 대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성걸 의원** 그렇다면 일부에서는 메르스와 가뭄 대책에 편승을 해서 대규모 슈퍼 추경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금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나 그다음에 메르스 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경기하강 위험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특히 또 청년실업 문제나 수출 부진 문제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성걸 의원** 조금 전에 부총리님 말씀대로 추경을 편성하려면, 물론 헌법 제56조에도 나오고 하지만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에 추경의 요건이 아주 엄격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류성걸 의원** 그러니까 메르스라든지 또는 가뭄은 자연재해로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기하강이라든지 청년실업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 89조 어디에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2항에 보면요, 경기 침체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추경 요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과거에도 이런 근거에 의해서 추경을 편성한 전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1항에 나와 있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이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자연재해, 다시 말해 가지고 홍수나 태풍 같은 이런 부분들로 피해가 나서 긴급히 복구할 소요가 많이 생깁니다마는 이제는 사회적 재해가 피해 규모도 훨씬 더 크고 또 영향이 심대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자연재해로 한정할 필요가 과연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메르스도 그렇고 사스도 그렇고 또 구제역 같은 부분도 그렇고 등등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큰 사회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성걸 의원** 본 의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헌법 제56조에 의하면 국가재정법 제89조1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규정이라고 그때 개정 당시부터도 논란이 있었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추경의 경우에 맞춤형이 돼야 되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추경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216조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걸 의원** 예.

작년의 경우에도 10조 9000억의 세수 결손이 났습니다. 13년에는 8조 5000억, 12년에는 2조 8000억의 세수 결손이 났는데 결국 지금 현재 추경을 한다면 재원으로서는 국채 발행밖에, 물론 내부적으로 한은 잉여금이라든지 관련되는 재원을 조금은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국채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여러 가지 재원 조달 방안을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류성걸 의원** 그래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관리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국가 채무가 작년에 530조 5000억 중에서 따져 보니까 적자성 채무가 55%를 넘어섰습니다, 금융성 채무는 45% 수준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지금 현재 2016년 정부 예산안 편성이 한창 진행 중인데 결국 이것은 내년도 성장을,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사실 메르스 사태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 경제는 어쨌거나 내수 소비를 중심으로 또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돼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지속되면서 금년보다는 내년에 조금 나아지는 환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르스 사태도 충격을 상당폭 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세계경제 성장 전망이 OECD나 IMF에서 연초에, 지난해 연말에 전망했던 것보다도 거의 한 0.67%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경제 회복 속도가 지난 연말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도 자연적으로, 특히 우리가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성걸 의원** 결국은 세수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추경은 앞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현실적인 성장전망을 적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뭄 관련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가뭄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경북의 경우를 보면 경북 피해가 울진 등 4개 시·군에서 한 2만 가구가 이상이 제한급수가 시작됐고 영주 등 7개 시·군에서 528ha 넘는 농작물이 지금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전국의 가뭄 피해를 세심히 살펴서 하루속히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만약에 추경을 편성하면 가뭄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류성걸 의원** 다음은 우리 경제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올해 3만 불 넘는 정도의 그런 지표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그렇게 선진국 수준의 경제, 열세 번째 경제대국입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이 사실을 피부로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민생경제지표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싸늘하게 식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1%대에 갇혀 있는 0%대를 행보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물가 수준도 0%대의 행보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가계부채와 국가채무는 늘어나고 있고 악화 일로에 있는 청년실업률, 지금 보니까 10.2%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급격히 하락하는 수출증가율,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봤을 때에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경제의 최대의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최대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가계부채 전체 총량이 1/4분기 기준으로 해서 1099조 3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전체 고소득자의 가계부채는 줄어들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9.2%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164.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주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가계부채 증가요인은 다양하게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택시장이 정상화가 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영향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부동산 버블기, 거래가 막 늘어나면서 이럴 때는 부동산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



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습니다마는 지금은 부동산가격이 굉장히 안정된, 작년에 부동산 거래량이 사상 가장 많은 수준, 100만 호 이상 거래가 났습니다마는 부동산가격 상승률은 1.4%로 안정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버블기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류성걸 의원** 지난 6월 11일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 0.25%p를 인하했습니다.

저는 한국은행의 이런 조치는 선제적 조치로서 아주 잘한 조치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금리 인하의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한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고 또 생산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고 다시 설비투자가 늘어나는 이런 형태의 선순환구조를 최대화하고 또 버블이 생긴다든가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마이너스 요인은 최소화한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걸 의원** 그렇다면 6월 11일 이후에 우리 정부하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모여서 이런 금리 인하에 따르는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는 형태의 어떤 회의라든지 또는 관련되는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저희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류성걸 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6월 11일 이후에 이런 회의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 3월 달 이후에 가계부채 관련되는 협의체를 만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6월 11일 이후에 이런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것은 수시로 실무자들끼리 꼭 무슨 회의를, 물론 필요하면 하겠습니다마는 서로 상황 점검을 하는 그런 소통을 계속 하고 있고요.

○**류성걸 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나서 실물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류성걸 의원** 지금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LTV·DTI 기준 완화 기한을 내년 7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류성걸 의원** 그렇게 났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가계부채가 또 늘어나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의원님 지금 저도 가계부채 유심히 보고 있고 그게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경각심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최근에 저희들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안심전환대출을 통해서 구조도 개선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가계의 상환 능력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다음에 연체율도 지금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 금융기관들의 BIS 비율이 무려 14%까지 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LTV, DTI를 활용해서 2금융권을 통해서 고금리대출을 늘린다든지 또 취약계층의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험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지금 정부 내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조만간 확정해서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걸 의원** 조금 전에 부총리 말씀이 안심전환대출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31조 2000억의 안심전환대출이 실행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저소득층은 대상이 안 됐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렇지 않습니다.

○**류성걸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점검을 하셔서 실제로 필요한 분, 실제로 취약계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류성걸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다중채무자 또 과다채무자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가계부채의 총량도 억제를 해야 되지만 또 질적 개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희도 공감

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한 34만 명 채무조정이 이루어졌고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약 120만 명 채무조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서민정책상품을 통해서 저리의 금융상품을 공급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걸 의원** 그런데 왜 유독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주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맥켄지 보고서,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그리고 OECD에서 우리나라를 가계부채 취약 7대국으로 선정을 하고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가계부채 관련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것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정 그렇게 보는 기관도 있습니다. IMF나 무디스, S&P 이런 쪽에서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능한 수준에 있고, 최근에 의원님 아시는 대로 무디스하고 S&P는 우리 가계부채 문제나 그다음에 공기업 부채 관리 또 재정건전성 이런 부분을 잘 평가해서 우리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조만간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성걸 의원** 저도 얼마 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제가 가계부채를 전연 신경 안 쓰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과도한 걱정은 심리, 경제, 대외신인도나 이런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류성걸 의원** 어쨌든 가계부채가 제일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외부평가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소구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택을 담보로 한 빚이, 채무자가 주택을 포기할 경우에 더 이상 상환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을 비소구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유한책임을 지는 형

태……

**○류성걸 의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비소구주택 담보대출이 없는 거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저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류성걸 의원** 결국 비소구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형태의 대출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채무자의 다른 재산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면 그 주택 이외의 재산에는 청구하지 않는다 이런 형태의 대출입니다.

**○류성걸 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주택을 포기하더라도 결국은 끝까지 갚아야 되는 그런 형태의 대출이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소구대출이라고 그래서……

**○류성걸 의원** 그러면 그것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대출 형태가 있고 비소구대출의 경우에는 나름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금융기관도 좀 더 엄격하게 대출 심사를 하겠지요.

다만 이럴 경우에도 역시 갖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채무자들의 상환 책임을 약화시켜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거나 혹은 금융기관은 그런 비용을 미리 감안해서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혹은 금리를 올리거나 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지요. 그래서 이런 양 측면을 잘 신중하게 비교·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성걸 의원** 지금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비소구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많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류성걸 의원** 지금 어떤 형태든지 금융권의 대출 관행을 선진화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의 총량 증가를 완화하고 저소득층과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한테도 생활의 안정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소구형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알겠습니다.

먼저 공적 대출인 국민주택기금대출에서 이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 효과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상황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일명 뉴타운사업지구가 41개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류성걸 의원** 대구에도 2007년 5월에 낙후된 동구 신암동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총 10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지금 현재 5개 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10개 중에 5개니까 절반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수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이 해제지역이 전부 낙후된 지역으로 주택건물이 낡고 슬럼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부 지원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그런 경우에 저희가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계획이 타당할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역은 그와 같은 지원의 방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류성걸 의원** 예, 지금 보니까 도시정비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도시재생사업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재개발촉진지역 이런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인프라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으로 대구 신암동의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에 좀 실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걸 의원** 또 한 가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보통 우리 도정법이라고 합니다, 도정법상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법 제63조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서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

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류성걸 의원** 그런데 그 실적은 완전히 전무합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사실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한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성걸 의원** 전체 해제된 지역이 슬럼화되고 낙후화되고 하는 부분들을 방지해야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류성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사항이 많습시다만 시간이 다 돼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는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과 산적한 현안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국민과 국회, 정부가 하나로 뭉쳐서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국회의 역할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경제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월 국회에 경제활성화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수 있도록 전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류성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국회의원 이개호입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우리 국민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메르스 공포에, 또 유례없는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한 달 이상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작년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 주었던 우리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지금 우리 국민들은 메르스 사태에서 똑같이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먼저 총리께 물겠습니다.

총리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초기 대응이 크게 미흡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우리는 조기 차단에 실패를 했습니다. 총리께서도 지금까지 메르스 대응이 총체적으로 미흡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개호 의원** 그러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또 잘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런 차원의 말씀이신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결과적으로는 초기에 역학조사를 광범위하게 해서 확산되는 것을 막고 또 그 과정에서 격리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신속하고 충분하게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개호 의원** 총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흡한 총체적인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병관리본부장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총리께서 취임하시기 전까지 총괄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였던 총리대행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책임일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은 온 힘을 다 모아서 메르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그 과정을 한번 다시 살펴봐서 고쳐야 될 점, 개선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의 방역 대책, 감염병 대책에 대해서 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개호 의원** 좋습니다. 총리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종료되고 나서 반드시 전체적인 과정을 점검해서 대통령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되

고요, 또 그 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사태가 빨리 끝나도록 한 뒤에 여러 가지 미비점들에 대한 보완·개선 또 제도적인 장치들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개호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대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감염 원인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정부는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기감염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현재 명확한 제시가 없고요.

또 질병관리본부의 감염원인 그리고 전파경로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역학조사요원 인력들이,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또 질병관리본부에 국민들에게 예방수칙이나 행동요령들을 알려 줄 홍보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낙타고기 생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등의 코미디 같은 그런 예방수칙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지금부터 검토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총리님 소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까지의 의학적인 전문가들의 판단은 메르스는 공기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병원감염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에 대해서 100% 이렇게 장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병원감염이 문제이고 지역감염 또 공기감염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은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다만 저희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역학조사관 문제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수궁을 합니다. 이 사태가 처음 생겼을 때 역학조사관이 32명이었다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대처하는 과정에서 4배 가까이, 단 기간이지만 그렇게 증원을 했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역학조사관들도 지금은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꼼꼼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수칙에 대한 홍보 문제에 관해서는 초기에 늦었고 좀 더 빨리했어야 된다 이런 의원님 지적에

공감하면서 조금 더 체계적인 대응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 또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도 메모하고 좀 더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서 보안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개호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태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나라 의료체계 공공의료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전체적으로 의료병상 기준으로 보면 공공의료 기능이 약 12%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OECD 평균이 77%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제가 방금 지적했던 역학조사 인력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소위 예방의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로 그분들을 수요로 하는 곳은 공공의료 분야입니다. 그런데 공공의료 기능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데 우수한 인력이 예방의학 분야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작년 말에 경남 진주의료원을 폐쇄했던 조치,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히 근시안적이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제에 공공의료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우리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해서 전반적인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 기능의 강화 부분에 관해서도 비중 있게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개호 의원** 총리께서는 우리 정부의 역량 그리고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메르스 사태를 언제까지 종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가 민간과, 정부 부문뿐만 아니고 중앙과 지방 또 군·학교 이렇게 인력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메르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염병의 특성 때문에 한 사람이 생겨도 일정 기간 동안은 저희가 종식을 얘기할 수 없고 또 어떻게 번져 나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끝낼 수 있는 시기가 언제나 이것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역량을 다 기울여서 가급적 조속한 시간 내에 메르스 사태를 종식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개호 의원** 분명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이개호 의원**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 지역구 함평이 주산지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양파, 지금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올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습니다.

○**이개호 의원** 그런가 하면 배추는 보니까 작년 보다 올랐다가 이달 들어서 아주 폭락세로 다시 접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폭락이라기보다는 올랐다가 정상 상태로 들어서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관령의 여름 고랭지 채소의 식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개호 의원** 그런데 농민들은 그렇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래서 받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보란 듯이 슬그머니 중국산이나 외국산을 수입해서 농민들 가슴에 멍이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결정 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러니까 지금 몇몇 품목들이 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것들 때문에……

○**이개호 의원** 오늘 양파, 배추 저울관세할당으로 수입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만일 앞으로 가격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때는 일정 부분의 수입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의원** 양파값이 떨어질 때는 정부가 뚜렷한 대책도 내주지 못하면서 가격이 모처럼 올

라 가지고…… 아직 출하가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해서 벌써 수입부터 결정한다는 말씀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의원님, 이 부분은 농산물은 생산과 소비의 특성상 생산이나 소비가 조금만 변해도 가격이 아주 폭등, 폭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동안에 계약재배라든지 수매비축 이런 것을 해 왔습니다마는 특히……

○**이개호 의원** 장관님의 변명을 듣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도 걱정, 올라도 걱정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차제에 그동안 논의되었던 농산물 가격안정제, 정부에서도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나서서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와 관련해서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까지 2년 한 3개월 지났습니다마는 물가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나서서 수입을 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가격안정제라고 일정한 범위 내의 가격을 제시하고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밖에도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생산자와 지자체가 스스로 조직을 하고 자율적으로 생산을 조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일정 부분 매칭을 해서 수급 문제를 풀어 나갈 용의가 있고 그런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개호 의원** 최저생산비 정도는 보장을 하는 방향으로 전국의 15개 지자체가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자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재원이 부족하다고 자꾸 아우성이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 한중 FTA로 인해서 우리 농수산업의 피해를 어느 정도로 농림부에서는 산정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앞으로 20년간에 걸쳐서 대개 국내 농축산물·임산물 쪽의 직접적인 생산액 감소액은 대략 한 1500억 규모가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개호 의원** 1500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습니다.

○**이개호 의원** 산자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지요, 최근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습니다.

○**이개호 의원** 그런데 작년 말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면 202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 6년 후까지 3조 4000억 정도의 한중 FTA 피해가 예상되고 그 안에 상당 부분 농수산업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산자부에서 발표했던 내용하고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차이가 큼니다. 그것을 보면서 산자부 발표가 피해 규모를 과소평가한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 가지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문의를 했더니 자기들은 그런 내용을 발표할 적이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시다.

어쨌든 이번에 한중 FTA의 피해 규모가 작게 나타난 것은 협상 과정에서 농업 분야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애를 썼고 그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양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적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물론이고 한중 FTA를 계기로 해서 우리 농업의 체질 강화, 또 넓어진 경제영토를 활용한 수출 증대, 이런 것을 위해서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한 별도의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개호 의원** FTA 피해 대책으로 정부에서 2004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피해보전직불제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이개호 의원** 시행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흡한 원인을 보니까 발동요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동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발동요건을 좀 완화를 해서 정부에서 홍보를 하는 대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동안도 사실 피

해보전직불과 관련해서는 발동 요건을 80%에서 90%로, 또 보전비율도 80%에서 90%로 지금까지 조금씩 이렇게 고쳐 왔습니다. 시행기간도 당초에 7년에서 현재 10년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난해에 우리가 한·영연방 FTA 때 '한중 FTA 대책을 마련할 때는 이것도 같이 협의를 하자', 이런 여야정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책 마련 시에 같이 협의를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개호 의원** 농지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이개호 의원** 또 감소뿐만이 아니고 그 속도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농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보전의 어떤 기능, 그것은 장관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그것과 관련해서 농지 감소 속도를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생태보전직불금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우리도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직불금 제도를 상당히 많이 강화해 왔습니다. 아직도 뭐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9개 종류의 직불금이 있고 전체적으로 순직불금만 하더라도 1조 5000억 정도 또 직불성 뭐 이런 지원까지 합하면 거의 2조 3000억 정도의 직불금을 지금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미국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직불금을 조금 더, 예를 들면 확대를 해야 된다 하는 의원님 지적에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생태보전직불 이런 부분들은 현재도 유사한 직불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의 중복성이라든지 혹은 또 설사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들의 공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대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개호 의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자부장관님, 미곡종합처리장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이개호 의원** RPC라고 부르니다마는 이 RPC 경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간 시설은 지금 거의 반 정도가 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이 관장하는 시설도 대부분이 지금 경영난에 허덕이

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경영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기요금 문제 좀 잠깐 짚어 보기 위해서 장관님 나오시게 했습니다.

지금 RPC의 건조·저장 시설에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설 내의 공정만 다른 도정시설은 또 산업용 전기를 부과하거든요. 이 부분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같은 데라도 작업의 성격이 다르면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주택시설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적용되지만 정화조 설비에는 산업용 전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 이렇게 요금체계를 가져간다고 해서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개호 의원** 뭘 말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아니, 그러니까 같은 공장 내에서 건조공정을 하는 경우는 농업용으로 적용이 되고……

○**이개호 의원** 그러니까 같은 공장 내에서 요금 체계가 다를 수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그다음에 도정 쪽은 산업용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개호 의원** 그럼 도정시설이 농업용 시설인가요, 아니면 제조업을 하는 시설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제조업입니다.

○**이개호 의원** 제조업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그것은 국제표준산업분류에도 제조업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산업분류에도 제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개호 의원** 지금 RPC가 굉장히 경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그런 측면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또 동일한 공장 내의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그동안에 논란이 돼 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RPC 전반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 문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농업용 전기를 확대 적용하는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매우 어려운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번 산업용에 대해서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하면서 토요일

날 중부하 부분을 경부하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정시설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 날 도정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개호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부총리님!

국내산 민물장어 주산지가 주로 어디인지 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의원님 지역구 그 근처에서……

○**이개호 의원** 제 지역구가 태반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요즘 가격이 많이 폭락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수입산은 또 아주 시장점유율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생산원가 미만으로 출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가가 낮기 때문에. 생산 어민들의 아우성이 뭐냐면 통관과 원산지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통관 절차도 보면 제도가 허술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세관장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수입업자들로부터 샘플을 제출받아서 육안으로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원산지 단속도 보면 실적이 최근에 대단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통관 및 원산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는데 이에 대해서 의지를 이 자리에서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민물장어 어가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물장어 수입이 7·8월에 아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때 통관 관리를 대폭 강화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 민물장어뿐 아니라 우리 농림·어업·축산 이런 쪽의 원산지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생산 농가에 피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부터 하여튼 이 원산지 부분은 철저히 관리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민물장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원산지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관세청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개호 의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이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님, 지역 현안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전남 담양군 대전면에 군전차포 사격장이 있습니다. 그 사격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금 30년째 소음과 진동 때문에 큰 피해를 보면서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이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전해야 될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끼리의 어떤 협의,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차체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나 또 주민들의 어떤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전차포 사격장과 유사한 지역들이 밀집해 있는 전방지역으로 이전하면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총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것은 93년도부터 이전을 검토 추진해 오는데 계속 지자체나 주민들의 의견이 달라서 이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해도 역시 그 지역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갈등의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될 텐데 한 번 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오래된 문제고 또 여러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이니깐 한번 충분히 검토를 좀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개호 의원** KTX 관련인데요. 지금 서대전 경유선이 익산까지 가고 중단이 됩니다. 그 선을 연장 좀 해서 김제-장성-광주로 잇는 그런 노선이 가능한데 그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난번 총리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한번 검토를 관련부처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이개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정부가 국민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따뜻한 관심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이개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중구·남구 출신의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熙國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 의원입니다.

역병과 가뭄, 늘어나는 빗 등 여러 가지 우환이 우리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림부장관님께 가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金熙國 議員 3년 전에도 104년 만의 가뭄이라고 하는 61일간의 가뭄이 있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金熙國 議員 그때 피해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지금 정확한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金熙國 議員 금년도 가뭄은 3년 전 가뭄에 비해서 더 심각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 수준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흔히들,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40년, 42년 만의 가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에 못지않은 심각한 가뭄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金熙國 議員 이 가뭄에 대해서 농림부는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발표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 議員 단기대책의 내용과 성과를 설명을 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단기대책으로는 우선 지금 가뭄 상황에서 하루빨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을 해서, 소위 양수기라든지 호스·급수차 이런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이 가뭄을 극복하자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저수지도 좀 준설을 하고 낡은 저수지도 개보수를 좀 해야 될 거고요. 또 산간오지라든지 도서지방 이런 데, 생활용수가 좀 부족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작은 댐이나 저수지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고, 4대강에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농업용수로 좀 끌어 쓰느냐,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熙國 議員 3년 전에도 가뭄이 왔는데 지금 답변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3년 전의 계획들, 3년 전……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저희들이 농업용수 개발, 항구적인 가뭄 대책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이것은 1년에, 금년도에 한 3000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저수지를 26개를 완공을 하고 현재도 38개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고, 또 기존의 낡은 저수지·양수장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에도 금년에 예산이 한 오천사오백억 이런 식으로 해서 용수 대책을 조금 마련을 해 왔다, 그러나 이게 워낙 방대하고 이래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다만 논 같은 경우에는, 논농사는 수리시설을 갖춘 논이 전체의 80% 정도 됩니다, 10년 한발에는 한 56% 되지만. 그동안 너무 논 위주로 용수개발을 해 왔기 때문에……

밭의 경우는 한 15% 정도밖에 용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논도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밭 기반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밭작물에 대한 용수 대책 이런 것들도 좀 적극 추진해야 되겠다……

○金熙國 議員 밭작물에 대한 농사가 시작된 지 몇 년 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 땅에서 농업이 시작한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金熙國 議員 2015년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뭐……

○金熙國 議員 좋습니다.

1년 동안에 우리나라 농업용수 총량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업용수 총 수요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170만ha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필요로 하는 양이 149억t 정도 이렇게 추계가 됩니다.

○金熙國 議員 그러면 공급 능력은 얼마를 갖추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우리가 현재 수리 시설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 한 98억t 정도, 65% 정도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熙國 議員** 나머지 부족한 물은 어떻게 공급 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부족한 물들은 그냥 그야말로 천수답 식으로 자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金熙國 議員** 지금 추가로 확보해야 될 저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지금 현재 가뭄의 상황이 어제, 그저께 비가 좀 오고 이래 가지고 당초에 한 7300ha 정도가 가뭄지역이라 했는데 그게 좀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양으로는 당장 현재 시점에서는 한 200만t, 208만t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金熙國 議員** 저수량입니까, 아니면 필요한 물의 양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필요한 물의 양입니다.

○**金熙國 議員** 어떻게 공급할 계획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래서 지금 말씀 올렸듯이 당장 급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수장비, 급수시설 이런 것들을 총동원하고……

○**金熙國 議員** 장관님, 그렇게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많지는 않지만 지금 수리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자원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선 급하게 할 수 있는……

○**金熙國 議員** 장관님 답변이 국민들한테 이해가 될 거라고 지금 답변하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급한 대로 이렇게 불을 끄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저수지 준설부터 풀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金熙國 議員** 장관님, 장관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은 사실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평균 1300mm의 비가 내리고요. 우연의 일치로 1300억t 정도 됩니다, 양이. 그중에서 저수할 수 있는 능력이 143억t입니다. 1년 내내 필요한 물의 양은 330억t이고요. 그중에 농업용수가 150억t 정도 되고 나머지가 생활용수, 하천유지용수, 공업용수입

니다. 그렇다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얼마의 수요가 필요한지 얼마의 공급 대책을 세워야지요.

지금 단기 대책으로 해 가지고 관정을 개발하고 급수차를 동원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글썄 그…… 관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대개 우리가 지난한 5년 동안에 관정을 1300여 기 공을 뚫었습니다.

○**金熙國 議員** 460억 들어 가지고 1300개 구멍을 뚫어서 1000만t의 물을 공급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습니다. 1000만t 정도……

○**金熙國 議員** 지금 현재 부족한 물의 양은 얼마 정도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지금 현재 부족한 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필요한 양은 한 200만t 정도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金熙國 議員** 장기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장기적으로는 전체 150만t 중에서 현재 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한 100억t을 빼면 나머지 한 50억t 정도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熙國 議員** 국토교통부는 항구적인 가뭄 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1억 6000만t에서 최대 4억 6000만t 정도의 저수 능력을 키우면 해소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부족한 물의 양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지금 협의 중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熙國 議員** 가뭄이 3년 전에도 와 가지고 전국이 난리가 났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2012년에 하천수를 활용하는 농촌용수공급 이런 구상이 있어 가지고 13년에 현지조사를 하고 그리고 2014년에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최근에 금년 2월까지 국토부와 환경부 이렇게 관계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해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熙國 議員** 장관님, 일반 횡집도 평시에는 광어를 두 마리나 세 마리 갖고 있다가 손님이 한꺼번에 수십 명이 온다 하면 광어를 공급하는 업체에 전화를 하면 바로 10마리 20마리 공급해

줍니다. 수십 년 동안 치수대책을 한 농림부가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하천수가 7억 2000만이 찰랑찰랑하는데 10km 20km 떨어진 농지나 30km 40km 떨어진 밭에서는 가뭄이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그릇이 모자람니까, 아니면 그 가득 찬 물을 배송할 관이 모자람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물그릇도 필요한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과 물을 필요로 하는 곳의 위치가 상당히 다를 겁니다.

○金熙國 議員 장관님, 실망스럽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다르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선은 물그릇도 좀 키울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金熙國 議員 농업용수를 위해서 얼마나 키울 필요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기존에 있는 저수지 준설부터 우선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金熙國 議員 지난 4년 동안에 저수지 95개를 증보사업했지요, 2조 5000억을 들여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金熙國 議員 저수량은 얼마나 키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독 높이기 사업을 말씀하시지요?

○金熙國 議員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것을 통해서, 전체로 아마 그 독 높이기 사업이 백 한 열 개 정도 저수지에 대해서 했는데요.

○金熙國 議員 저수능력 확대량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대개 한 2억 3500t……

○金熙國 議員 이번 가뭄에 도움이 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일부 도움이 된 것도 있지만 그게 물이 있는 보, 주로 저수지, 그러니까 4대강 유역에 가뭄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이번에는 경기도와 강원도 쪽에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金熙國 議員 그러면 지난번에 저수지 증보사업을 할 때 가뭄이 발생하는 저수지를 독 높이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가뭄이라는 것은……

○金熙國 議員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金熙國 議員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인 가뭄해소 대책은 불가능한 거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자원을 잘 활용하는 이런 개혁도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金熙國 議員 지난번에 7억 2000만t의 하천수 활용계획이 왜 좌절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 부분은 하천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토부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金熙國 議員 국토부 소관이 아닙니다. 물그릇은 국토부가 키웠고 사용은 농림부가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한 물이 농업용수입니까, 아니면 농업용수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업용수인데요……

○金熙國 議員 농업용수가 부족하면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업용수인데 4대강 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부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熙國 議員 2012년도에 농림부가 하천수 활용을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金熙國 議員 중단됐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현재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시간이 걸려 가지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金熙國 議員 장관님, 밥통에 밥은 가득한데 밥상을 차리지 못해서 밥을 못 먹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독재자 카다피가 4000km의 대수로를 만들었습니다. 2300년 전에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는 400km의 아피아 가도라는 수로를 만들어서 로마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했습니다.

있는 물이라도 제대로 잘 쓸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잘 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간이 좀 걸렸던 만큼 더 열심히 속도감 있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熙國 議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장관께 집값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오후 첫 질의 때 야당 의원님께서 계약갱신청구권, 즉 임대료를 상한제를 도입하고 임대차 기간을 세 사는 사람이 필요한 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요구하자 하는 그 안에 대해서 정부가 왜 반대하는지 총리님께 질의를 했고 총리님께서서는 답변을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金熙國 議員** 들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金熙國 議員** 주무장관으로서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우선 지금 현재 나온 계약갱신청구권제는 현재 2년에서 그것을 4년으로 한 번에 걸쳐서 허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월세상한제는 상한 폭을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것인데, 과거에 89년도에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한 번 전세가 격이 급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런 조치가 되면 그와 같은 부작용이, 단기적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말하자면 먼저 올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하나의 걱정이고요.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가격통제가 결국은 공급을 낮추는,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전월세 상승 요인이 되지 않은가 이런 것이 저희들의 걱정입니다.

○**金熙國 議員** 장관님 스스로 공부를 해서 개발한 논리입니까, 직원들한테 보고받은 논리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보고도 받았고요, 저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金熙國 議員**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고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임대료 통제가 가능하고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임대료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金熙國 議員** 독일은 임대료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물론 독일은 그와 같은……

○**金熙國 議員** 왜 독일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金熙國 議員**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말씀하지 말고.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글썽요, 사회적인 계약 문제도 있겠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은 실례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보이고 또 지금 저희가 일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른바 뉴스테이법에 의하면 임대료 상한을 상당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구요.

기본적으로 전세 시장은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독특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熙國 議員** 장관님의 답변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잘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熙國 議員**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총리님과 야당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임대료를 통제하고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의 주택의 성격은 사회주택이고 우리는 시장주택입니다.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낮게 책정을 할 수 있고 임대료를 통제할 수 있고 계약기간청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집을 지을 때 싼 금리로 돈을 빌려줍니다. 임대료 대신에 싸게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가상각비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자가 사회사업가가 아니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金熙國 議員** (신문을 들어 보이며)

오늘 이 신문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오늘 못 봤습니다.

○**金熙國 議員** “당첨되면 수천만 원 번다 아인교?” 이렇게 써 놨습니다.

못 봤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그건 제가 못 봤

습니다.

○**金熙國 議員** 지금 대구와 부산에는 부동산 광풍의 악마의 이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분양 열기가 좀 높다는 말씀이신……

○**金熙國 議員** 좀 높습니까? 실수요자가 tap니까, 지금 투기세력이 들어와서 발호를 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글썬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투기세력의 발호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분양 열풍이 특정 지역에 높은 것은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金熙國 議員** 경쟁률이 1000 대 1까지 가는데도 주무장관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노무현 정권 5년 내내 했던 주택정책의 가장 큰 목표가 뭐였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주택가격 안정을 꾀장히……

○**金熙國 議員** 그렇습니다.

지금 주무장관으로서 주택정책의 핵심이 뭐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저희로서는 주택 시장의 정상화 그리고 서민 주거 안정의……

○**金熙國 議員** 정상화라는 게 어떤 의미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그동안은 상당히 아주, 매매 내지는 분양을 포함해서 거래가 거의 없었다시피 했습니다.

○**金熙國 議員** 몇 년부터 몇 년까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대개 2008년 이후 가을,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난 이후 적어도 작년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熙國 議員**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원인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글썬요, 그것이 처음에 시작한 서민계층을 위한다는 뭐 그런 것이 있었겠지만 하여튼 상당히 무분별할 정도의 대출, 우리로 치면 주택담보대출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아주 과감하게 되다 보니까 이른바 부실한 대출이 많이 일어난 것이 일시에 그 부작용이 터지면서 생긴 걸로 그렇게 파악……

○**金熙國 議員** 표2부터 먼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원인과 그 참상을 볼 수 있는 도표입니다.

미국 정부는 6%에 달하던 금리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경기부양을 이유로 1%대로 낮췄습니다. 3년간. 집값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만에 폭탄이 터져 버렸습니다, 2007년도.

많은 전문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원인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모기지 업체들의 탐욕, 평가업체들의 거짓말 그리고 저금리 정책이었다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피해는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金熙國 議員** 150만 명이 샀던 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800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결국 부자들 손에 들어갔지요.

IMF 사태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金熙國 議員** 원인이 뭐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그 당시에는 아마 직접적인 원인은 외환 부족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金熙國 議員** 왜 외환 부족이 발생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물론 그것이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었고요.

○**金熙國 議員**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앨런 그린스펀은 그의 저서 'The Age of Turbulence' 281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MF의 원인은 한국 정부가 거짓말했다'라고.

25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했다고 했는데 실제 외환을 집행해야 될 때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金熙國 議員** 정부의 거짓말이…… IMF의 피해는 더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잘 알고 있습니다.

○**金熙國 議員** 150만 명이 실업자가 돼 버렸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金熙國 議員** 수많은 국민들이 금팔찌, 은팔찌 다 팔았습니다. 대한민국 주요 업체들의 주식의 삼사십% 다 외국인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정부가 거짓말을 해 가지고 IMF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가져오면 안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그것은 그렇습니

다.

○**金熙國 議員** 권고합니다. 주택 시장을 예의 주시하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金熙國 議員** 언론에 이 정도 보도가 나오게 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600조 넘는 부동산금이 저금리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은행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5~6%의 마진이 있는 투자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부동산 투기로 가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저희가 아주 예의 주시를 해야 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주택 시장이 그 정도로 고수익의 이른바 버블 시장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주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熙國 議員** 인류 역사상 가장 부동산 투기의 피해를 입었던 분이 아이작 뉴턴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별자리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탐욕은 계산할 수 없다’.

정부가 그런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인간의 탐욕은 컨트롤 안 됩니다. 2008년도 서브프라임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민심이나 돈은 정부의 의지대로, 정부의 계획대로 안 움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金熙國 議員** 저는 제 예상이 틀리기를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주택 시장이 그 정도 수준은 아직 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미래 위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대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熙國 議員** 머지않아 2, 3년 안에 제가 맞는지 장관님이 맞는지 입증됩니다. 제가 틀리기를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제가 2, 3년 내에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걸 단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위험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예의 주시고 있다, 현재 상황이 그렇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金熙國 議員** 지켜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金熙國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종룡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총리님께 드릴 질문이었는데 이게 가계부채 문제라서 우리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100조 가까이 되지요, GDP 81% 정도.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 議員** 우리나라 국민은 5100만 명이고 1813만 가구입니다. 이 중에 빚지고 사는 집이 몇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

○**金熙國 議員** 67%인 1223만 가구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소득증가율하고 부채증가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金熙國 議員** 소득이 3.7%이고 부채는 6.6% 정도 됩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6%.

○**金熙國 議員** 소득증가율이 부채증가율보다 높다면 만사가 해결되지만 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더 높게 되면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金熙國 議員** 그런데 지금 소득은 거북이고 빚은 토끼처럼 되는 그런 형국인데, 주택담보대출만 여쭙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금융회사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金熙國 議員** 2.5에서 한 2.7% 됩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은행권의 경우에……

○**金熙國 議員** 미국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미국은 조금 더 높습니다.

○**金熙國 議員** 훨씬 높습니다. 4.2%입니다.

기준금리는 미국은 0.5% 정도가 맵시럽이고 우리는 1.5%인데, 기준금리는 우리가 1%나 더 높는데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우리가 2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기적으로 공급되는 자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금리로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를 가져가는……

○**金熙國 議員** 이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큰 문제가 양도 양이지만 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문제가 생깁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 議員** 첫째로 지금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는 비율을 몇 %로 알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원금분할상황으로 하는 것이 지금 많이 올려서 한 30% 정도대 됩니다.

○**金熙國 議員** 실제 지금 한 73%는 이자만 돌려 막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 議員** 두 번째로 가장 나쁜 게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정금리 비율이 몇 %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2010년에 한 0.5%였습니다. 하나는 안심전환대출 이후에 한 30%대로 올랐었습니다.

○**金熙國 議員** 76%가 변동금리입니다. 금리가 바뀌면 돈 빌려준 사람은 아무 책임 안 지고 돈 빌리는 사람은 완전히 100% 덮어쓰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金熙國 議員** 아까 존경하는 류성걸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집 이외의 소득이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차압을 못 하지만 우리는 다 하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외국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미국의 일부 11개 주 이런 데는 소구대출과 비소구대출…… 즉 비소구대출, 유한책임을 지는 그런 대출을 하는 대출관행이 있습니다.

○**金熙國 議員** 세 번째가 우리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 가지고 빌려 갖고 실제로 집 사는 데 몇 % 정도 쓰고 나머지 다 생활비나 사업비로 쓰는데 몇 %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실제 주택 구입에는 한 50% 정도 쓰고요.

○**金熙國 議員** 그렇습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기존 차입금 상황이 한 30% 정도 됩니다.

○**金熙國 議員**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담보대출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담보대출 능력이 얼마로 떨어집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지금 LTV라고 해 가지고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규모의 평균이 한 52% 정도 됩니다.

○**金熙國 議員** 그렇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金熙國 議員** 그러면 주택담보, 집 산다고 해 가지고 돈 빌려서 반 정도는 집 사고 받은 생활비로 쓰더라도 나중에 담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담보대출을 통해서 실질적인 주택구입 또 기존 자금 대출의 상황 이런 것으로 한 80% 쓰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적으로 쓰인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값의 한 50% 정도의 가치만큼만 대출을 해 주니까 적어도 집값의 한 절반 정도는 완충지역이 있다 이런 뜻이지요, 가격상으로.

○**金熙國 議員** 그러면 가장 큰 핵심이 소득하고 부채의 관계인데 지금 현재 이 추세로 나가더라도 나중에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아까 부총리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가계대출 문제가 우리 경제의 큰 리스크 요인임은 사실입니다. 다만 당장에 그것이 시스템 리스크로서 큰 문제가 되겠느냐 하면 여러 가지 구조로 볼 때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하는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어떤 관리 대책을 할 것인지를 관계부처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찰을 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내겠습니다.

○**金熙國 議員**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좀 올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그건 빌리는 사람하고 빌려주는 사람하고 자유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못 합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지금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자율화돼 있는 금리입니다. 은행이 대출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金熙國 議員** 은행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

규제 때문에 못살겠다고.

두 번째로 변동금리제하고 고정금리제를 50 대 50 정도는 해야 되는 게 가장 상식에 맞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위험부담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나 반반씩 저야 되는 게 가장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 議員** 지금 그 구조가 정상적이라고 보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정금리대출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2017년까지 한 40%까지는 고정금리대출을 만들겠다는 계획하에 지금 여러 가지 제도의 유인이나 혹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金熙國 議員** 이 문제는 대부업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金熙國 議員** 우리나라 대부업의 가장 높은 금리를 얼마로 허용해 주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지금 법상으로 34.9%까지……

○**金熙國 議員** 전 세계에서 가장 높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글썄, 그건……

○**金熙國 議員** 전 세계에서 대부업 금리를 인정한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다른 나라도 여러 가지 최고금리의 한도를 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金熙國 議員** 일본은 얼마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일본은 20%입니다.

○**金熙國 議員** 그런데 종편을 보게 되면 아침·저녁부터, 밤낮으로 돈 빌려 가라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허용 한도액이, 광고를 몇 편 정도 허용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허용 한도는 없고 그것은 자율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아주, 제가 판단컨대도 약 한 달에 4만 5000건, 하루에 한 1600건 정도를 광고를……

○**金熙國 議員** 그런 나라가 도대체 전 세계에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도한 광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熙國 議員** 저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적 이전에.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래서……

○**金熙國 議員** 대부업체들의 그 무분별한 광고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기를 요구를 하고……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金熙國 議員** 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래서 정무위원회에서 대부업 광고의 제한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고요, 법사위에서도 며칠 전에 통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에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金熙國 議員**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소득이 빚보다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빚이 소득보다 많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金熙國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및 여야 의원 여러분!

갈 길은 멀고 임무는 무거운데 짙은 먹구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정치인은 혐오스럽지만 정치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정권은 유한해도 국민은 영원합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이 세 가지가 우리 생활을 조금이라도 펴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확신을 합니다.

천 사람이 ‘좋아요’ ‘좋아요’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하는 말이 더 가치 있다는 중국의 속담을 상기하면서 저의 모든 우려와 걱정이 틀리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김희국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 **반론발언**

(17시08분)

○**의장 정의화** 오늘 대정부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오전 질문에 대해서 반론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반론발언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반론발언 시간은 3분입니다.



이원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욱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화성시를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입니다.  
오늘 오전에 수원 권선구의 정미경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반론이 있어 나왔습니다.

먼저 화성시장이 장례식장 사장 출신이라는 지적,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지적을 들으면서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생각났습니다. 어려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이유로 이름을 숨기고 다른 지역에 가서 존경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의 원죄만을 쫓아다니 자베르 경찰이 생각났습니다.

화성시민이 두 번이나 선택한 채인석 시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과하셔야 마땅한 일입니다.

채인석 시장이 장례식장 사장이었다는 사실은 죄가 아닙니다. 근거 없는 문제 제기로 또 하나의 장발장을 만드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 채인석 시장의 형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가까운 곳을 선택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정미경 의원의 지적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장과 더불어 지자체가 운영하는 대규모 장례식장이 인근지역에 들어온다면 기존의 낙후되고 작은 장례식장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대형마트 하나가 지역의 자영업자 상권을 망가뜨리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셋째, 화성시 화장장을 반대하는 서수원 주민들에게 과연 피해가 갈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예정지에서 수원 금곡동까지는 거리가 2km, 두 개의 산을 넘어야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문제라면, 수원 연화장 옆에는 500m 반경에 광고신도시를 비롯한 용인 수지택지지구, 흥덕지구 등 신도시가 들어와 있고 심지어 이의초등학교, 시립 상현어린이집, 지예슬유치원, 서원초·중·고등학교 등의 학교들도 다수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의 경우 내곡보금자리와 700m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 입주

한 주민은, 이미 1만 8000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지적대로라면 강남구 57만 명의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유일호 국토부장관님!

화장시설 설치하는 국가장려사업입니다. 어느 시의 이익을 위한 사업일 수 없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고 장려해도 부족할 터인데 국가가 반대하고 지연하려 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사실관계조차도 틀린 단순 민원 때문에 사업이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5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자체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어서 안 된다는 말은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지적입니다.

주민 공람 등 절차를 진행한 지자체는 새누리당 소속의 남경필 도지사였습니다. 장사시설이 설치되는 매송면은 화성갑 지역으로 그 지역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의 서청원 의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소속의 함진규 의원, 김명연 의원도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설치하고자 합의한 공동형 화장시설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로 이룬 쾌거이며 모범적 결단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신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주민들께 총리와 국무위원, 우리 국회의원들이 큰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앞장서서 수원 서부지역 주민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의화 이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켜 준 여러 의원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 의원(280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垠希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춘석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해찬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택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전해철	정갑윤	정두연	정문현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나경원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용래	주호영	진성준	진영	천정배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립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민홍철	박광운	박기춘	박남춘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수현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개의 시 재석 의원(90인)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강동원	경대수	길정우	김광림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철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김상훈	김성곤	김성주	김용태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김정록	김제남	김제식	김춘진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김한표	김희국	나성린	노영민
신기남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노철래	도종환	문대성	문병호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윤조	문희상	민홍철	박대동	박민수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박성호	박인숙	박지원	백재현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서청원	신경림	신동우	신정훈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신학용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안상수	안홍준	오제세	유기준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기홍	유성엽	유승우	유의동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후덕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이개호	이명수	이미경	이언주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에리사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재영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강후	이개호	이균현	이노균	이춘석	이헌승	인재근	임수경
				전순옥	정두연	정미경	정세균

정의화 정진후 정희수 진성준  
 천정배 최경환 최동익 최봉홍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홍영표  
 홍철호 황인자

○속개 시 재석 의원(78인)

강동원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기준 김동완 김민기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제식 김종태 김춘진 김태원  
 김한표 김희국 남인순 노웅래  
 류성걸 민병주 민홍철 박남춘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윤옥 박인숙 박지원  
 배재정 백재현 서기호 서영교  
 손인춘 심재권 안상수 안효대  
 여상규 오신환 오제세 우상호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이강후 이명수  
 이미경 이상일 이언주 이에리사  
 이원욱 이이재 이재영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춘석  
 이한성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전정희 정갑윤 정성호 진성준  
 최경환 추미애 홍익표 홍철호  
 황영철 황진하

○산회 시 재석 의원(89인)

강길부 강동원 길정우 김기준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영록 김용남 김용익 김재원  
 김제식 김춘진 김태원 김한표  
 김희국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민식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백재현 부좌현 서영교  
 서용교 손인춘 신계륜 신상진  
 신성범 신정훈 안홍준 양승조  
 양창영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유기준 유대운 유승민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영석  
 윤호중 은수미 이에리사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종배 이종훈 이진복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현승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순욱

전정희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조해진 주승용 최경환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홍문표 홍영표  
 홍철호

○청가 의원(9인)

김진태 김희정 송광호 원혜영  
 이철우 정수성 조명철 주영순  
 진선미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박형준  
 입법차장 구기성  
 의사국장 장대섭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황교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출석 정부위원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금융위원장 임종룡

【보고사항】

○의안 제출

군사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5. 6. 19 전해철·진선미·김현·우윤근·박범계·서영교·윤후덕·우상호·박남춘·박지원 의원 발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

(2015. 6. 19 이자스민·인재근·정희수·이한성·김태원·박원석·강길부·원혜영·박인숙·김상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2015. 6. 19 박민수·부좌현·백재현·전해철·황주홍·이춘석·김춘진·양승조·김민기·원혜영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5. 6. 19 황주홍·이개호·이종걸·조정식·김성곤·김광진·박홍근·박완주·최동익·김민기·유성엽·이원욱 의원 발의)

이상 2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5. 6. 19 홍익표 · 이원욱 · 임내현 · 이익영 · 배재정 · 박주선 · 김승남 · 이목희 · 박홍근 · 윤관석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5. 6. 19 김영록 · 유성엽 · 홍종학 · 최원식 · 오제세 · 주승용 · 박지원 · 박남춘 · 강동원 · 김우남 의원 발의)

이상 2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하겠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  
(2015. 6. 19 박홍근 · 이찬열 · 안민석 · 황주홍 · 배재정 · 전순옥 · 장하나 · 윤관석 · 김성주 · 도종환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5. 6. 19 김민기 · 황주홍 · 이춘석 · 강기정 · 이찬열 · 정호준 · 박민수 · 조정식 · 백재현 · 민병두 · 전해철 의원 발의)

**行政代執行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 발의)  
(2015. 6. 19 박민수 · 부좌현 · 백재현 · 전해철 · 황주홍 · 이춘석 · 김춘진 · 양승조 · 김민기 · 원혜영 의원 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015. 6. 19 신정훈 · 이개호 · 김영록 · 유성엽 · 정세균 · 정진후 · 권은희 · 박민수 · 정호준 · 김제남 의원 발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5. 6. 19 황주홍 · 이개호 · 이종걸 · 조정식 · 김성곤 · 김광진 · 박홍근 · 박완주 · 이찬열 · 최동익 · 유성엽 · 이원욱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5. 6. 19 황주홍 · 이개호 · 이종걸 · 조정식 · 김성곤 · 김광진 · 박홍근 · 박완주 · 최동익 · 김민기 · 유성엽 · 이원욱 의원 발의)

이상 6건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 발의)  
(2015. 6. 19 신정훈 · 이개호 · 김영록 · 유성엽 · 정세균 · 정진후 · 권은희 · 박민수 · 정호준 ·

김제남 의원 발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2015. 6. 19 유성엽 · 김영록 · 이학영 · 도종환 · 황주홍 · 김현 · 장하나 · 정진후 · 김승남 · 박광운 · 백재현 · 박범계 · 홍종학 · 최원식 · 임수경 · 최민희 · 부좌현 · 박남춘 · 문희상 · 정세균 · 우윤근 · 유은혜 · 오제세 · 전순옥 · 김성곤 · 신계륜 · 김상희 · 이찬열 · 민홍철 · 강동원 · 정성호 · 김관영 · 김우남 · 이인영 · 신정훈 · 박민수 · 김동철 · 한정애 · 인재근 · 박주선 · 박병석 의원 발의)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2015. 6. 19 박민수 · 부좌현 · 백재현 · 전해철 · 황주홍 · 이춘석 · 김춘진 · 신정훈 · 김민기 · 김우남 의원 발의)

이상 3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하겠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6. 19 정부 제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  
(2015. 6. 19 홍익표 · 이원욱 · 이인영 · 전순옥 · 배재정 · 박주선 · 김승남 · 이목희 · 박홍근 · 윤관석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5. 6. 19 남인순 · 김성주 · 조정식 · 김용익 · 인재근 · 황주홍 · 원혜영 · 박완주 · 신기남 · 김상희 · 최재성 · 최동익 · 김성곤 · 이목희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 발의)  
(2015. 6. 19 김광진 · 홍종학 · 부좌현 · 이개호 · 양승조 · 김성곤 · 황주홍 · 백재현 · 오영식 · 박홍근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2015. 6. 19 최동익 · 이개호 · 김성곤 · 최재성 · 양승조 · 김성주 · 황주홍 · 전해철 · 조정식 · 김태년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5. 6. 19 김기선 · 김명연 · 박윤옥 · 신경림 · 이종진 · 김태환 · 홍문중 · 정문헌 · 강길부 ·

이주영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5. 6. 19 유승희 · 이종걸 · 오영식 · 양승조 ·  
민병두 · 김관영 · 이윤석 · 강기정 · 박수현 ·  
유은혜 · 홍종학 · 김영록 · 진성준 · 노영민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2015. 6. 19 이목희 · 우원식 · 은수미 · 윤관석 ·  
홍영표 · 최규성 · 최동익 · 김용익 · 김성주 ·  
배재정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2015. 6. 19 이목희 · 우원식 · 은수미 · 윤관석 ·  
홍영표 · 최규성 · 최동익 · 김용익 · 김성주 ·  
배재정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5. 6. 19 서영교 · 최재성 · 전해철 · 박수현 ·  
김영록 · 유은혜 · 우윤근 · 오제세 · 변재일 ·  
박지원 · 이개호 · 부좌현 · 정청래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5. 6. 19 서영교 · 최재성 · 전해철 · 박수현 ·  
김영록 · 유은혜 · 우윤근 · 오제세 · 변재일 ·  
박지원 · 이개호 · 부좌현 · 정청래 의원 발의)

이상 10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

(2015. 6. 19 이자스민 · 인재근 · 류지영 · 정희수 ·  
장윤석 · 강길부 · 이종배 · 양창영 · 박인숙 ·  
김상훈 의원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5. 6. 19 김영록 · 유성엽 · 홍종학 · 최원식 ·  
오제세 · 주승용 · 박지원 · 김우남 · 추미애 ·  
강동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5. 6. 19 홍익표 · 이원욱 · 임내현 · 이인영 ·  
전순옥 · 배재정 · 박주선 · 김승남 · 이목희 ·  
박홍근 의원 발의)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2015. 6. 19 서영교 · 최재성 · 전해철 · 박수현 ·

김영록 · 유은혜 · 우윤근 · 오제세 · 변재일 ·  
박지원 · 이개호 · 부좌현 · 정청래 의원 발의)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5. 6. 19 김상희 · 양승조 · 유승희 · 박남춘 ·  
김윤덕 · 김광진 · 박수현 · 임내현 · 김태년 ·  
신기남 · 이미경 의원 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5. 6. 19 황주홍 · 이개호 · 이종걸 · 조정식 ·  
김성곤 · 김광진 · 박홍근 · 박완주 · 이찬열 ·  
최동익 · 유성엽 · 이원욱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